

2023

1

Monthly  
Magazine

통권 230호

2023 - 1

세무회계경영

저널

신

외부감사법

가이드북



#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세무회계경영저널

##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 이달의 특집

## · 알기 쉬운 新 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융감독원)

#### [주요정보]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 · 등록일 2003  
 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  
 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안안  
 세건  
 회조  
 계세  
 법정  
 인보





# 안사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5명 + 세무직원 286명 = 성실한 401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0년 매출액 535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829-7557 외부감사 · 세무대리 · 회계 · 기장 · 재무 · ESG컨설팅 · 기업가치평가 · IFRS 적용 · 변환 컨설팅 ·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

서울본사  
(영등포)

(Sox 서비스) · 금융자문 · 품질관리심리실 · 준법감시인 · 재경본부운영 · 전문지식정보운영팀

대표이사 박윤종 · 등기이사 장용석 · 김형석 · 고주현 · 안수현 등 75명 등기이사파트너 / 심리실: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고두환 · 고영일 · 공희성 · 권창현 · 구수홍 · 김경수 · 김봉수 · 김수범 · 김수영 · 김영근 · 김옥철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형석 · 나경수 · 설찬수 · 박규태 · 박기훈 · 박병준 · 박상현 · 박정열 · 박지은 · 박근별 · 배익권 · 송형곤 · 양철성 · 유진우 · 유지운 · 윤훈기 · 이만선 · 이미지 · 이사야 · 이승환 · 이원재 · 이종량 · 임권일 · 임정훈 · 조민기 · 조성민 · 조영우 · 제갈연구 · 진수미 · 표정협 · 최영근 · 최영진 · 한상표 · 허근 · 홍상연 · 홍재권 · 황준호 · 허진영(변호사: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 · 곽영미 · 김태현 · 이현섭 · 배문호 · 송태현 · 최만욱 · 신민석 · 조세용 · 황준호 · 정호신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 · 김용환 · 김수범 · 홍희빈 · 이혜리 · 강윤희 · 김현단 · 선지우 · 이원규

가산디지털본실

02-6011-5514 이남재 · 정현 · 허근 · 황창연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김현민 + 3인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 · 이동계 · 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 · 김형진 · 정대환 + 10인

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4인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운 · 이상태 · 양승민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고주현 · 양용석 · 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 · 홍영표 · 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 · 유지운 · 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 · 고경호 · 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 · 원명민 · 강병훈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호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이원재 · 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만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 · 이승환 · 이희건 + 5인

품질관리팀

829-7555 박윤종 · 손세정 · 홍재권 · 김형석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 안사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사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창업적 활동함.(02-829-7575)

- 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 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 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외국 · 해외 비즈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과 자원개발 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사외이사취임,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 · 훈련강의저널

+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 이달의 특집

- 알기 쉬운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 개정 발간 (금융감독원) ..... 2

## 세무정보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 125

## 1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2(월)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제2기분 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 납부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사업소득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10(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자진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중권등거래세(농특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20(금)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12월) ..... 144

이달의

특 집

# 알기 쉬운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 발간

— 금융감독원 —

## 제1장 외부감사법의 개요

### 1. 외부감사법이란?

#### 1. 외부감사의 의미

-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란 외부감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외부감사의 정의

- ❖ 외부감사란 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또는 "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의미함.

#### 나. 외부의 감사

- ❖ 외부감사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監査)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기관인 감사(監事)나 기타 내부 조직에 의한 감사(監査)는 외부감사가 아님.

#### 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

-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란 외부감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부감사법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이 아니거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회계감사(임의감사)는 외부감사가 아님.
- ❖ 개별법률에서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개별법률(특별법)에 따른 외부감사는 외부감사법상의 외부감사와는 구별됨.
  - 회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하지 않고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실무상 "외부감사",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 위의 경우는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외부감사법 자체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는 아님.

## 2. 외부감사법의 목적

- ❖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음(법 제1조).
  - 외부감사법은 이러한 공익달성을 위하여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자기의 비용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도 여러 행정상의 의무를 부과 하고있음.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일반법으로,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의 목적과 기본 원리에 맞도록 하여야 함(법 제3조 제1항).
  - 다만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외부감사법과 다른 경우에는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을 따름.

## II. 주요용어 및 관련기관

### 1. 주요용어의 의미

#### 가. 회사

✓ 외부감사법상 회사란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를 말한다.

❖ 회사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의미함(법 제2조 제1호).

- "회사"란 상법상 회사를 의미하므로,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어야 함(상법 제169조).
-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상법이 준용되더라도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예 : 수협은행 등)은 외부감사법상의 회사가 아닐 수 있음.
- 유한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이 준용되더라도 영리목적이 아닌 전문자격사의 업무의 조직화를 위하여 결성된 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은 외부감사법상의 회사가 아님.
- 또한 회사란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하는 회사가 아님.

#### 나.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하였거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함(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

####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의미함(법 제2조 제5호, 영 제4조)

#### 라. 임원

- "임원"이란 이사, 감사압사위원회 위원 포함), 상법상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 지시자를 의미함(법 제2조 제6호).

### 마. 감사안상장법인 감사인

- 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을 의미함(법 제2조 제7호).
- 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주관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며(법 제9조의2), 이를 통상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지칭함.

### 바. 감사보고서

- ❖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 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의미함(법 제2조 제8호).
  -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함(법 제8조 제7항).

### 사. 금융회사

- ❖ 금융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협은행을 의미함.

## 2. 관련기관

- ❖ 외부감사법상의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으로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이 있음.
  - 외부감사법상 주요 행정권한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보유하고, 금융위원회는 규정의 제·개정 승인이나, 중한 제재조치 권한을 행사함.
  - 금융감독원장은 회계감독업무의 실무집행 및 상장법인 등의 감리업무를 담당함.
  -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제·개정 업무 및 비상장법인 등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음.
- ❖ 금융감독원장,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행정기관은 아니나, 위임·위탁 규정을 통하여 외부감사법상의 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 해당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이들 기관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행정청으로서 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등이 적용되며, 법치주의, 적법절차·비례의 원칙 등 헌법·행정부의 일반원칙의 구속을 받게 됨.

### III. 관계 법규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또는 "법")은 외부감사제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5개장 51개 조문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 관련 법규에 관한 상위 규범으로서 다른 하위 외부감사 법규들에 대한 해석의 한계 및 기준이 됨.
  - 제1장(총칙)에서는 법률의 목적, 주요개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제2장(회사 및 감사인)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의 선임·지정·해임 및 감사인에 대한 감독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장(감독 및 처분)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장(보칙)에서는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제5장(벌칙)에서는 외부감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부칙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외부감사법은 1980.12.31.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친 이래, 2017.10.31. 최초로 전면 개정되어 2018.11.1.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통상 「新외부감사법」으로 부르고 있음.
  - ※ 이하에서는 편의상 2018.11.1. 시행된 외부감사법을 "신 외부감사법" 또는 "(전면개정) 신 외부감사법"으로 지칭하고 신 외부감사법 시행 전의 외부감사법을 "구 외부감사법" 또는 "(전면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으로 지칭하기로 함.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또는 "령")은 외부감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률의 집행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4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또는 "시행규칙")은 외부감사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하여 제정된 총리령으로서 1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또는 "규정")은 외부감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행정규칙(금융위원회 고시)으로서 4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은 외부감사법 및 하위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행정규칙(금융감독원 세칙)으로서 47개 조문 및 54개 신고서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금융위원회의 고시인 외감규정과 금융감독원장의 시행세칙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 상위법인 외부감사법령에서 법규사항을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받은 사항의 한도 내에서는 대외적인 강제력이 인정되는 법규적 효력이 있음.

## 제 2 장 외부감사의 대상

### 1. 외부감사대상회사

#### 1. 주권상장법인

- ❖ 주권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함(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

## 2. 상장예정법인

### 가. 개요

- ✓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감사인 지정신청을 통해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 ❖ 상장예정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를 의미함.
  - 상장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모 등이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상장예정법인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상 회사는 신청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아 상장예정법인으로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 상장예정이라는 사유가 있으면 외감대상이 되므로 실제로 상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외감 대상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회사가 상장법인이 되려는 사정이 소멸하면 다른 외감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는 통상 다음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향후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도 소멸하나,
    -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발생한 외부감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제재 또는 처벌이 있을 수 있음.

### 나. 우회상장·합병상장

- ❖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와 합병하여 상장하거나(우회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방법으로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우회상장이나, 합병상장을 하려는 비상장회사는 상장예정법인으로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됨.
    - 우회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우회상장을 의미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이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의 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경우를 의미함.

### 3. 비상장주식회사

#### 가.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직전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함.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고, 1개월 만은 1개월로 봄.
  - 예를 들면, 직전 사업연도가 3개월인 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3개월 의 매출액을 4배로 계산(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됨.

#### 다. 규모가 작은 회사 중 일정 기준 이상의 회사

- ✓ ① 자산 120억 이상, ② 부채 70억 이상, ③ 매출액 100억 이상, ④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 1) 외감대상 주식회사의 기준

- ❖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다음 4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됨(영 제5조 제1항 제3호).

##### 외감대상 주식회사 판단기준

-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종업원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만 여기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 2) 동 조항의 취지 및 연혁

- ❖ 동 조항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회사를 외감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임.
  - 2018.11.1. 전면개정 당시의 외감법 시행령은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액 100억 원·종업원 100명 미만 중 "해당하는 항목이 3개 이상인 회사(소규모회사)가 아닌 회사

를 외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 동 조항은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0.10.13.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조문형태로 표현방식이 개선된 것으로, 개정 전후의 의미는 동일함.

< 주식회사의 사례별 외감여부 판단 예시 >

사 례	외감기준 이상인 항목의 개수	시행령 적용 결과	외감여부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4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이상 중 4개에 해당	외감대상
자산 119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3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이상 중 3개(부채, 매출액, 종업원)에 해당	외감대상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2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매출액, 종업원)에 해당	외감대상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99억, 종업원 100명	1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100명 이상 중 1개(종업원)에 해당	외감비대상 (소규모회사)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99억, 종업원 99명	0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100명 이상 중 0개에 해당	외감비대상 (소규모회사)

#### 4. 유한회사

- ❖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가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유한회사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됨(법 부칙 제2조).

##### 가. 자산총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 ❖ 의미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판단기준(앞서 3의 가, 나항에서 기술)과 동일함.

##### 나. 규모가 작은 회사 중 일정기준 이상의 회사

- ✓ ① 자산 120억이상, ② 부채 70억 이상, ③ 매출액 100억 이상, ④ 종업원 100명 이상  
⑤ 사원 수 50인 이상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 1) 외감대상 회사의 기준

### ❖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과 차이가 있음

- 외감대상이 되는 유한회사란 규모가 작은 비상장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외감대상 기준 4개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수 100인)에다가 사원 수 50인 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5개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 결국 유한회사 중에서는 다음 5가지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됨.

#### 외감대상 유한회사 판단기준

-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⑤ 사원 수 50인 이상 : 사원이란 유한회사에 관하여 출자좌수에 따른 지분을 가지는 자로서 유한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자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직원(종업원)은 사원이 아니다.

- 현행 유한회사 외감대상 판단기준은 규정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0.10.13.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조문형태로 표현방식이 개선된 것이며, 개정 전후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점은 앞서 "외감대상 주식회사의 기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 < 유한회사의 사례별 외감여부 판단 예시 >

사례	외감기준 이상인 항목의 개수	시행령 적용결과	외감여부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사원 50명	5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이상 중 5개에 해당	외감대상
자산 119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사원 50인	4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이상 중 4개(부채, 매출액, 종업원, 사원)에 해당	외감대상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사원 50인	3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이상 중 3개(매출액, 종업원, 사원)에 해당	외감대상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99억, 종업원 100명, 사원 50인	2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이상 중 2개(종업원, 사원)에 해당	외감비대상 (소규모회사)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99억, 종업원 99명, 사원 50인	1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이상 중 1개(사원)에 해당	외감비대상 (소규모회사)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99억, 종업원 99명 사원 49인	0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이상 중 0개에 해당	외감비대상 (소규모회사)
--	----	---	------------------

## 2) 2019년 11월 1일 이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회사

- ❖ 주식회사가 2019년 11월 1일 이후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의 등기일로부터 5년간은 주식회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외부감사 대상여부가 판단됨(영 제5조 제2항 후문).

※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할 수 있음(상법 제604조 제 1 항)

- 주식회사에서 조직 변경을 한 유한회사는 5년간은 외감대상여부 판단시 사원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외감대상 기준 4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임.
- 이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완화된 외부감사 기준을 적용받아 외부감사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임.

## II. 외부감사 면제 회사

- ✓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을 통하여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법 제4조 제2항).

### ※ 구 외부감사법과의 차이점

- 구 외부감사법 제2조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본문에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유가 있는 회사는 제외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외부감사 제외사유가 있는 회사는 당연히 외부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음
- 이와 달리 신 외부감사법 제2조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회사에게 적극적 면제신청을 요구하고 있음

- 현행 외부감사법의 해석상 외감대상 회사는 외부감사 면제 사유가 있는 회사라도 회사의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 회사가 면제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라도 외부감사는 완전·유효하고 회사는 이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있는 회사라도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
  -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부터 2주 이내(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에 신고하여야 함(시행세칙 제18조).

#### 참고사항

구 외감법 시행당시 외부감사 적용 제외사유이었던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구 외감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는 삭제되었음.

## 1.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 비상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지정됨
  - 외부감사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아닌 특수법인인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2. 단순 신설법인

- ❖ 신 외부감사법은 감사대상 사업연도에 최초로 법인설립등기를 한 회사를 외부감사 면제 대상 회사로 정하고 있음.
  - 신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구 외부감사법에서 신설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제외하던 취지에 맞추어 신설 등기된 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영 제 5조 제3항 제1호).

## 3. 합병 분할·조직변경 신설법인

- ✓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회사는 신설시점을 기준으로 외감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1) 개요

- ❖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전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신설법인이므로 해당 회사의 설립 이전인 직전 사업연도는 존재하지 않음.
  - 신 외부감사법에서는 외감대상 회사가 합병 등 신설법인이 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없더라도 신설시점의 자산규모 등이 외감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 외부감사법에서는 외감대상인 회사가 분할하거나 합병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신설법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 구 외부감사법의 취지와 같이 합병·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을 외부감사대상으로 규정하였음.
  - 동 규정의 취지는 외감대상회사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신설법인이 되더라도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
- ❖ 합병·분할·조직변경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설립등기시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나. 설립등기시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이 외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2) 합병·분할·조직변경 신설 주식회사

-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신설 주식회사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등 3가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의미함(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본문)
  - 결국 합병·분할·조직변경 신설 주식회사의 경우는 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외부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설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설립시의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해당기준과 관련하여 합병, 분할, 조직변경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시의 자산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3) 합병·분할·조직변경 신설 유한회사

- ❖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신설된 유한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의 대



상이 됨

- 합병·분할·조직변경 신설 유한회사의 경우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신설 주식회사의 기준이 되는 3가지 항목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에서, 사원 수 50명 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4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보고있음(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단서)
- 결국 합병·분할·조직변경 신설 유한회사의 경우는 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사원 수 5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음.

## 4. 특수한 형태의 회사 등

### 가. 지방공기업

- ❖ 지방공기업은 회사의 규모 등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지방공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나. 투자회사등

- ✓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1) 개요

- ❖ 개정 신 외부감사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를 외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구 외부감사법 제2조 제2호, 영 제2조 제2항 제2호)
- 구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는 투자회사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음.

#### 2) 투자회사 등의 범위

- ❖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투자회사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되는 투자회사를 의미하므로,
- 특별법에 따라 설립, 등록되는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투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통상 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이외에도 특별법(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회사도 존재함

####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라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의미함(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

#### 라. 자산유동화법상의 유동화전문회사

- ❖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될 수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함(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5호)
  -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되는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의미하므로,
    - 자산유동화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회사는 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 ※ 다만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다음의 아. 3)항에서 후술함.

#### 마. 거래정지처분회사

-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인 경우에는 외부감사가 면제될 수 있는 거래정지처분회사에서 제외됨.

#### 바. 해산·청산또는파산사실이등기되거나 1년이상휴업중인회사

- ❖ 해산, 청산, 파산 사실이 등기된 등기부등본이나, 최근 1년 이내의 휴업상태를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외감제외가 될 수 있음.

#### 사. 합병으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 합병으로 인한 소멸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실상 합병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병등기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아닌 특수법인인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아.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회사

1)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3) 기타 유동화전문회사

-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인정 기준

- ①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②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 ③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 ④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 ⑤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4) 사실상 폐업회사

- ❖ 연락 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만, 이를 위하여는 실무상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치게 됨.

<외부감사 면제대상 회사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예) >

외부감사 제외사유	제출할 소명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이 아닌 회사	해당회사 목록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 이 아닌 회사	해당회사 목록 등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해당 내용이 등기된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회사	투자회사 등록 또는 인·허가 관련 제출(또는 공시) 문서, 법인 등기부등록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투 자회사	투자회사 등록 또는 인·허가 관련 제출(또는 공시) 문서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 설립의 근거법령이 확 인되는 서류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외부감사 대 상)	등기부등본 및 당좌거래정지처분 통보서류(금융결제 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청산 중인 주식회사 (해산, 파산, 청산 등)	해당 내용이 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최근 1년 부가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매출매입 내역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주식회사	등기부등본(합병등기 후)
금융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관련 금융위원회 공문 등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 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마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업무위탁계약서, 자산위탁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에 휴폐업으로 신고된 회사	국세청 휴폐업 사실 증명원
자산 등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1)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 1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2)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 2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직전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 표준재무제 표 증명원  종업원 인원 확인서류는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결산월 귀속분)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확인서류는 사원명부 또는 감 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된 주주 현황(주주 인원 수 확 인가능한 경우)



## 제3장 감사인의 선임

### I. 감사인의 자격

#### 1. 개요

- ❖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나눌 수 있음.
  -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감사인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회계법인·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개인은 감사인이 아님.
  - 전면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이하 "상장법인등">의 감사인의 자격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신 외부감사법은 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였음.

#### 2.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제한

-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만이 가능하며, 감사반은 될 수 없다
  - \*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회계법인 중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음.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인은 회계법인만이 될 수 있음.
  - \*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 ※ 상장법인등의 감사제한 예외규정

-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9조 제1항 제1호),
  - 현재까지 감사제한의 예외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을 규정한 시행령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예외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 외부감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회계감사 제한규정

- 법 제9조 제2항은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과거 외부감사법 시행규칙은 이에 따라 감사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6년 개정 이후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감사인은 현재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함

### 3.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제한(감사인 등록제)

- ❖ 법 제9조의2에 따른 감사인등록 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경우 회계법인 중에서도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한 회계법인만이 감사인이 될 수 있음.
  - 관련 내용은 제9장 감사인 등록제도에서 후술함.

## II. 감사인 선임기한

### 1. 개요

- ❖ 신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감사인 선임기한을 단축하였음.
  - 구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규모 및 특성과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신 외부감사법은 일반적인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 외부감사 대상 첫 해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음.
- ❖ 감사인의 선임은 통상 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지므로, 감사인의 선임기한이란 감사계약의 체결기한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의 체결 이전 단계인 감사인의 선정만으로는 기한 내에 감사인의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2. 통상의 회사

- ❖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 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3.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전(12월 결산설인의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 선

임기한은 매년 12월 31일)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란 상법 제54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매 사업연도 개시일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의미함.

#### 최근 사업연도 말의 의미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근 사업연도 말"의 의미는 감사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이 아니라,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의미함.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감사인 선임의무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하므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회사인지 여부는 감사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결정됨.
  - 따라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인지 여부의 판단시점(감사대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서의 "최근 사업연도 말"이란 감사대상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을 의미
- 예를 들어 2023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사에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2022 사업연도에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어야 하고,
  - 2022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이란 2021 사업연도 말이므로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2021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기준이 됨.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금융회사 중에서 다음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함.

####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제외회사

- ①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5조원 미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금융투자업재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② 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4.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

-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동 조항의 취지는 외부감사를 받는 첫해에는 준비기간을 더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 동 선임기한은 회사 설립이후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

거 외부감사를 받았던 회사라도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됨.

### Ⅲ.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이하 "상장법인 등")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 선임의무를 상장법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었으나,
    - 개정 외부감사법은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음.

#### ※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의 의미

- 법률문언상 3개 사업연도를 동일하게 선임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회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동일하게 되도록 감사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회사가 일단 3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감사인을 1~2개 사업연도 단위로 자유롭게 선임하여도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으로 볼 수 있게 됨
  - 하지만 동 조항의 취지는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을 특히 더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개 사업연도 동안의 감사인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 선임의무란, 동일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이 3개 사업연도씩 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3개 사업연도 이상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님.

#### 2. 그 밖에 비상장회사 등

- ✓ 중소형 규모의 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1개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다.
- ❖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형·비금융 비상장회사는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게 됨.

-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 선임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에 해당함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복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연속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법상 이러한 계약이 불허되는 것은 아님.
- 외부감사법상의 의무없이 3개 사업연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은 유효하지만, 외부감사법에서 강제하는 3개 사업연도의 연속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3개 사업연도 기간동안 연속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외부감사법상으로는 강제되지 않으므로,
  - 1개 사업연도 계약이 가능한 회사가 임의로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년차, 3년차 계약시 다른 감사인과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동일 감사인 선임관련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참고사항

-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 당시 체결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3년 감사계약은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하는 3년 연속 계약이 아니므로, 개정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2019 사업연도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비상장 금융회사는 과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IV. 감사인의 선정

### 1. 개요

- ✓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후보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감사인의 선임과정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함.
  - 감사계약은 회사가 체결하는 것이고 회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경영진(대표이사)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나,
    -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임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특히 감사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2. 감사인의 선정

- ❖ 감사인의 "선정"이란 감사계약을 체결할 회계법인(감사반)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 감사인의 "선정"은 감사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감사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므로, 감사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회계법인(감사반)에 감사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감사인의 "선임"과는 구별됨.

※ 구 외부감사법의 내용

- 종전의 구 외부감사법은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개정 신 외부감사법은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고 규정하여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능동적으로 강화하였음

### 3. 감사인의 선정절차

#### 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인을 선정하여야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감사위원회가 선정
  - (감사위원회 미설치회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회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회사가 선정

####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 ❖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함.
  -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할 의무가 있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가 아니더라도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됨.
  - 감사위원회란 상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감사위원회를 의미하므로 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일반적인 운영 및 결의방식은 상법 등 감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함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은 별도의 항에서 후술함

#### 3)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

- ✓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는 감사없이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으나,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생략할 수 없다.

-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상법 :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법 제37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음.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령상 근거없이 단순히 감사를 미선임하고 있는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인 선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동 규정은 상법 등에서 이해관계자가 적은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존중하여 감사인 선임과정 등에서도 감사에 관한 절차를 배제한 것임

※ 적용배제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의미

- 법 문언상으로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는 것인지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동 규정의 취지 및 상법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는 취지가 아님을 고려하면
    -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적용배제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이 경우에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규정까지 적용배제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라도, 감사인 선정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함

## 나. 그 이외의 회사

- ✓ 중소형규모의비상장회사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감사인을선정하되 전기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감사인 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설치회사 감사위원회가선정
  - (감사위원회미설치회사 감사가선정
  - (감사를두지아니하는회사 회사가선정

\*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상장회사, 유한회사 등을 중소형 규모의 비상장회사라고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함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에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점은 위 가의 3)항과 같음
  -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함
    - 다만 자본금 10억 이상 유한회사는 회사가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정함(법 제 10조 제4항 제2호 나, 다목)

- ❖ 전기감사인 선임 이후 당기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을 그대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별도의 감사인 선정절차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10조 제4항 제2호 가목).

## 4. 감사인선임위원회

### 가. 개요

- ❖ 감사인선임위원회란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성한 조직을 의미함.

### 나. 감사인선임위원의 자격

-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 사외이사, 주주, 채권자, 기관투자자 등 총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를 의미하며,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사외이사로 볼 수 없다.
    - (기관투자자·주주·채권자) 주식 채권의 소유여부는 형식적 명의로 파악하나, 실질적인 권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감사인선임위원은 회사의 소속직원은 아니나,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40조 제1항)
  - ❖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정원은 다음과 같음
- 1) 감사 1명
- ❖ 당해 회사의 감사를 의미하고(영 제12조 제2항 제1호), 반드시 상근감사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 한편 상법 등에서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 감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위원을 외부의 독립성 있는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음



## 2)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 ❖ 사외이사(상법 제382조 제3항)란 그 회사의 상시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를 의미함(영 제12조 제2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로 선임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가 아닌,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이를 사외이사로 볼 수 없음.

## 3)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 ❖ 기관투자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의미함(영 제12조 제2항 제3호).
  -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서 규정되어 있음.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관투자자는 제외되는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름.
- ❖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이에 해당됨.
  - 증권금융회사가 거래소시장에서 자본시장법 제326조 제1항 제2호의 대여업무 수행(증권유동금융)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되며,
  - 사업연도 개시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기관투자자는 제외됨.
    - 위와 같이 주식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기존 기관투자자보다 주식수가 많게 된 치순위였던 기관투자자가 위원에 해당됨.
- ❖ 주식의 소유여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되나, 회사가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투자회사(펀드, 집합투자기구) 등이 주주인 경우 주식의 소유 명의자인 투자회사 자체는 기관투자자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운용사는 기관투자자일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가 투자회사(펀드,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의 권리자를 기관투자자로 파악하여 기관투자자의 소유주식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
- ❖ 위원 자격을 가지는 자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이나, 위원 자격은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것이므로, 소속 임직원이라는 사실 이외에 기관투자자 본인의 권한 위임이 필요함

#### 4) 주주 1명

-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인 주주를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1 명이 이에 해당함 (영 제 12조 제2항 제4호).
  - 여기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란 위 3)항에서 선임위원 참여 자격을 가지는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므로,
    - 차순위 주식소유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기관투자자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기관투자자는 최대 주주 1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위원자격으로서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
  - 주주란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 주주도 해당될 수 있음.
    -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의 의미, 증권금융회사의 주식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 까지 주식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위 3)항 기관투자자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 5)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이에 해당함(영 제12조 제2항 제5호).
  - 채권자 중 금융회사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금융회사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협은행을 의미(법 제9조 제1항 제3호)하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함.
  - 채권액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에 보유한 채권액이 기준이 됨.
    - 채권액의 산정은 채권의 형식적인 명목이 기준이 될 것이나, 실질적인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도 있음
  - 신 외감법 시행 당시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은 임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1.1.12. 시행령 개정으로 임직원으로 자격이 확대되었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의 의미는 기관투자자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 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 1)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정원

- ❖ 감사인 선임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정원 수를 모두 합하면 6명이 되므로,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최소 5명, 최대 6명까지 구성할 수 있음.

## 2) 위원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 ❖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기관의 자격은 중복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주주와 채권금융기관 자격도 가지는 경우 기관투자자로, 주주가 채권금융기관 자격도 가지는 경우 주주로 간주하여 선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규정 제9조 제1항).
  - 이에 따라 배제되는 주주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자격은 차순위 주식·채권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됨.

## 3) 위원 자격자가 복수인 경우

- ❖ 감사인 선임위원의 자격을 갖춘 외부위원이 복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회사의 주주,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들 각자가 동일한 수량의 주식이나 채권액을 보유하고 경우에는 법령상의 선임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의 위원이 법령상의 정원을 초과하게 됨.
  - 외부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 외감규정은 감사가 주식의 보유규모·보유기간 및 채권의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여 내규 또는 정관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규정 제9조 제2항).
  - 주식 보유규모·보유기간 및 채권의 잔존만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 감사인 선임절차에 이해관계가 높은 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식의 보유규모가 클수록, 보유기간 및 채권의 잔존만기가 길수록, 참여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정원을 초과하는 외부위원 자격을 갖춘 자가 주식의 보유규모·보유기간 및 채권의 잔존만기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법령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하여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한 법령상의 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4) 위원 자격자가 5인에 미달하는 경우

- ✓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외부전문가는 회사로부터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 회사에 따라서 감사인선임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결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감사인선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 외부전문가란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하 "외부전문가 위원")을 의미함.

- 다만 이 경우 감시는 외부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 사유를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함(규정 제9조제3항제1호).
- ❖ 외부전문가 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인선임위원 자격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선임될 수 있음.
  - '부득이한 경우'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위원이 없거나,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연락 두절, 출석(대리출석 포함) 거부 및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이 경우 회사는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 요구될 수 있음.
  - 외부전문가의 자격이 되는 "전문성"이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등의 전문 자격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나, 회사는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객관적 근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함.
  - "독립성"에 대하여 법규상 정의는 없으므로, 독립성의 유무는 법규의 취지(회사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될 문제임.
    - 회사와의 계약 또는 거래관계 등으로 회사에 종속되거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통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 5) 수개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

- ✓ 지배·종속관계가있는 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회사별로 각각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지배·종속의 관계의 회사 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의 선임절차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다른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로 당해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음.
- ❖ 각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갖춘 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인선임위원은 법상 자격이 인정되는 한 다른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과 중복되는 경우도 가능함.
  - 결국 각각 다른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은 가능하나, 감사인선임위원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선임절차는 각각 이루어져야 함

## 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 1) 위원장

- ❖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함
  - 호선이란 위원들 개인들의 투표를 의미하는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결과는 구분되므로, 호선만을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개최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음.

### 2) 정족수

-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3) 의결권의 대리행사

- ✓ 기관투자자, 주주, 채권금융기관 위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는 의결권 대리행사가 불가능하다.
- ❖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기관 위원(이하 "외부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유 및 그 위원의 대리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 대리인의 자격은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이 외부위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감사인선정과정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한 외부감사법령의 취지에 반하므로,
  -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은 외부위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또한 법령상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한 위원은 기관투자자, 주주, 채권금융기관 위원에 한정되므로, 해당위원을 대체하는 외부전문가 위원은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허용되지 않음.

## 마.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의 전원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전원 출석하고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 ❖ 감사인선임위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또는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기관) 위원 3인의 출석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약식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출석위원의 전원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인선임위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이를 동의할 5인 이상의 감사인선임위원이 우선 선임될 것이 요구됨.
  - 다만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동의는 선임위원 개개인별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결로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최 동의만을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개최·의결될 것이 요구되지는 않음.
- ❖ 감사는 약식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위원들의 명단 및 서명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함(규정 제9조제3항제2호)
-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의 자격이 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다만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기관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사외이사를 대체할 수 있음.
  - 감사인선임위원 중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는 위원장인 경우에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참여가 가능하나,
    - 정식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가 주주·기관투자자·채권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약식 감사인선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함.

## 바. 문서화의무

- ❖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인적사항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의 주요발언 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함(영 제12조 제7항).

# V. 감사인의 선임절차

## 1.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 ✓ 감사인을 선정하기 이전에 회사는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야 하며,  
- 기준 및 절차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나,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 감사인을 선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므로, 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영 제 13조 제3항 전문)

### 가. 기준 등의 마련 의무자

- ❖ 기준 및 절차 마련의 의무가 있는 지는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이므로 회사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회사(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음.
  - 다만 감사인 선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 ❖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기준 및 절차 마련에 사원총회의 승인이 요구됨(영 제13조 제3항 후문)

### 나. 마련시기

- ❖ 감사인 선정기준 등은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마련하여야 하므로, 기준의 마련일자가 감사인 선정일보다 이후가 된다면, 선정기준 등을 적법하게 "미리"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다. 기준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감사인 선정기준 등의 내용에 대하여 법규상 구체적인 규율사항은 없으므로,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법규상 다음과 같은 사항은 선정기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회사에 적합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 등을 의미함(영 제13조 제4항 제1호)
  -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라는 취지이므로 시간, 인력, 보수 등이 반드시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 －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하여 최소 요구되는 감사시간·인력·보수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감사시간·보수등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음.
- ❖ 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감사시간 기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시간제도는 법규의 취지가 다르고 표준감사시간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 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시간 기준을 표준감사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 2)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 ❖ 감사인의 독립성이란 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함.(영 제 13조 제4항 제2호)
  - 감사인의 전문성이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의미함.

## 3) 전기감사인에 관한 사항

### ①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영 제13조 제4항 제3호)

- ❖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 외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법 제14조 제1항)
  -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감사인 선정기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차기 감사인 후보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요구됨
  - 전기감사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전기감사인의 의견을 선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므로, 전기감사인이 관련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임

### ② 전기감사인에 대한 평가결과(영 제13조 제4항 제3호 가목)

- ❖ 전기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미함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에 관하여 미리 문서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법 제10조 제6항), 동 확인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③ 감사업무와 관련한 협의내용 등(영 제13조 제4항 제3호 나목)

- ❖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결과 및 그 활용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④ 감사·감사위원회와의 대면회의(영 제13조 제4항 제3호 다목)

- ❖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함.



⑤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영 제13조 제4항 제3호 라목)

- ❖ 시행령은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도록 규정(영 제13조 제4항 제3호 라목)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 라. 문서화

-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함(법 제 10조 제5항)
  - 감사인 선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법상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경우(법 제 10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에게 문서화 의무가 있음
  - 문서화란 성문의 형태로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규상 정형화된 형식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반드시 회사 내규의 형태를 가질 것이 요구되지는 않음.
  - 이와 더불어 감사인 선정기준과 절차가 객관적 증빙으로 보존될 필요가 있으므로,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정하여 준수하여야 함.

## 2. 감사인의 선정

- ✓ 감사인 후보평가는 복수후보 뿐만 아니라, 단일후보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며
  - 감사인 후보평가를 위해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 충실한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는 화상회의는 대면회의에 포함되나, 영상이 송수신되지 않는 음성회의는 포함되지 않음

### 가. 감사인 후보평가

- ❖ 감사인 선정을 위하여는 감사인 선정기준에 따른 감사인 후보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감사인 후보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복수의 후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단일후보에 대한 평가도 가능함.
- ❖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없는 경우(감사위원회, 감사 단독으로 선정할 수 있는 회사)에는 선정자가 평가하여 적정 후보를 감사인으로 선정하게 됨.
  -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자(감사 또는 회사)가 승인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보를 감사인으로 선정하게 됨.

## 나. 대면회의

### 1) 개요

- ❖ 감사인 선정과정에서 회의체(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가 선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할 것이 요구됨.
  - 대면회의란 종전 구 외부감사법의 서면회의와 달리 위원들이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의미하므로, 위원이 아닌 감사인 후보는 대면회의 개최시 직접 출석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아니함.
- ❖ 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서면회의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신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정과정의 충실화를 위하여 대면회의를 강제하고 있으며, 대면회의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대면회의에 화상회의·음성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 화상회의의 경우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충실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하면 대면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음성회의의 경우 영상이 송수신되지 않는 음성회의(전화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회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2) 회의내용의 문서화

- ❖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감사인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를 검토한 결과, 대면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을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 3. 감사계약 체결

- ✓ 회사는 감사인 선정절차에서 검토된 취지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 후보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회사는 적법하게 선정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감사계약 체결시의 계약 조건은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 감사인 선정절차에서 평가된 내용과 최종적인 감사계약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감사인후보평가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 감사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감사인 선정절차에서 검토된 내용과 실제 계약체결 조건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사인 후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평가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실시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감사인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음.

## Ⅵ. 감사인의 선임보고

### 1. 주주에 대한 보고

- ❖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①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②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③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함.
- ❖ 보고방식은 위에서 열거한 방식 중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되,
  - 주주에게 문서로 통지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에 의할 경우 공고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유지되어야 함.

### 2.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보고

- ✓ 회사와 감사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3년 연속계약 의무에 따른 2년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고의무가 없으나 감사인은 보고하여야 하며
    - 중소형 규모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기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할 경우 보고의무가 없으나, 감사인은 보고하여야 한다.
- \* 비상장회사로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나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

#### 가. 개요

- ❖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 체결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계약 체결보고 접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감사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게 됨.
  - 보고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①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②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

용, ④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임(영 제18조 제2항).

#### 유의사항

- 종전과 달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비상장금융회사는 전기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보고를 생략할 수 없음(3개 사업연도마다 한번씩 보고)

#### 나. 보고 예외

- ❖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계약보고 첫해에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을 보고하였으므로, 2·3년차 감사계약에 대한 체결보고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 ❖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형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선임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 ❖ 회사가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음.

### Ⅶ. 사후확인

-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감사인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의미함)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 10조 제6항)
  -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시는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 한편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절차 없이 지정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감사인 선정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후보평가는 요구되지 않음(법 제 10조 제7항 제1호).
  - 다만 지정감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감사보고서의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결국 지정감사계약 체결을 위하여 미리 감사인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은 요구되지는 않으나, 향후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제4장 감사인의 지정(上) - 직권지정

### I. 감사인의 지정이란?

#### 1. 개요

-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회사와 지정감사인 모두 감사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 감사인의 지정이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함.
  - 감사인의 지정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감사인지정의 처분행정청은 금융감독원장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감사인의 지정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있으나, 감사인의 구체적인 지정방법은 법령 등에 따라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임의로 특정 지정감사인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음.
  - 감사인의 지정통보에 따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은 지정감사인으로서 당해 회사를 감사하게 됨.
  -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 과정이 지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 동일한 회계법인이 감사인 선임과정에 따라 A회사에 대하여는 지정감사인, B회사에 대하여는 자유선임감사인이 될 수 있음.
  - 지정감사인의 감사와 자유선임된 감사인의 감사는 감사방법이나 감사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 회계처리기준위반 전력이 있는 등 공정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지정감사인은 자유선임 감사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감사인의 지정처분은 그 자체로 감사인 선임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통보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감사인 선임효과가 발생함.
  - 지정처분을 받은 회사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통보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지정처분은 감사계약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음
  - 회사가 감사인 지정통지를 받았음에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상법 제401조의 제1항에 규정된 자) · 이사 ·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 등(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 회계업무담당자(이하 "관련 임직원")는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음(법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 제46조)
  -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통지를 받았음에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회계법인을 1년간 지정감사인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감사인 지정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2. 감사인 지정의 유형

-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연속 6개 사업연도 자유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음
  - 주기적 지정제와 구별하여 회사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정하는 사유를 실무상 "직권지정"이라고부르고 있음
- ❖ 결국 감사인 지정은 "직권지정"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장에서는 우선 직권지정 제도를 설명하고, 주기적 지정제에 대하여는 다음장에서 후술함.

## II.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지정)

- ❖ 감사인 지정은 금융감독원장의 재량행위이나, 회사에 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1.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 회사 스스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 ❖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감사인 지정요청은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하여야 하므로 법 제10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사업연도 개시 이후 45일 이내·사업연도개시전·사업연도개시 후 4개월 이내) 내에 이루어져야 함.

## 2. 감사인 미선임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 감사인 미선임 회사는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며, 지정받은 감사인과 반드시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은 법 제10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인을 미선임한 당기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을 하고 있음
- ❖ 감사인 미선임과 감사인 지정에 대한 감사계약 불이행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함.
  -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미선임하고 재차 감사인 지정처분에도 지정감사계약 체결을 불이행한 경우 법 제42조 위반(감사인 미선임)과 법 제44조 위반(지정감사계약 불이행)이 각각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형법상 경합범 관계).

## 3.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 감사인 선임절차 관련 법령을 위반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법 제10조 제3항)
- ❖ 또한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후보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함(법 제 10조 제4항).
- ❖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의무가 있음에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법 제 10조 제3항 위반),
  - 회사의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선정 및 선정승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경우(법 제 10조 제4항 위반)에는 감사인 지정사유가 될 수 있음.
- ❖ 감사인의 선정 및 선정승인 절차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외감규정 등에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음(영 제12~13조 참조)
  - 형식적으로 선정 및 선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정 및 선정승인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선정 및 선정승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4. 감사인 부당교체(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
  - 회사의 감사인 교체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권선물위원회가 개별사안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 회사가 외감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다음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외감규정 제11조).

##### 감사인 부당교체 사유

- ① 회사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중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감사계약을 감사인에 요구하는 경우
- ② 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③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보수를 현저히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고) 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의 내용**

□ 개정 전 구 외감규정은 감사인 부당교체사유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한정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를 감사인 부당교체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구 규정 제11조 제1항 제4호 본문), 신 외감법 도입에 따라 개정된 외감규정에서는 동 내용을 삭제하였음

※ 개정 전 규정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교체하더라도 감사인 교체사유가 감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감사인 부당교체로 보지 않았음(구 규정 제11조 제1항 제4호 단서)

- 개정 신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로 단축되는 회사가 있으므로,
- 감사인 교체 이후 감사의견에서 한정 의견 등이 나오는 경우에 구 규정에 따르면 사후적으로 부당 교체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의 삭제는 불가피함

**5. 회계처리기준위반이 확인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됨.
- ❖ 다만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생략하거나 경고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로서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 경고 이하의 조치란 경고·주의·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외감규정 제26조 제1항 제5~7호)를 의미함.

**6.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해당 회사의 감사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는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등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됨(법 제6조 제6항).
  - 감사인 등이 이를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7. 법에서 정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주권상장법인(법 제11조 제1항 제6호)****가. 3개 사업연도 재무기준 해당회사**

-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법 개정 이전 사업연도 및 주권상장 법인이 아닌 사업연도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 ❖ 주권상장법인이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①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②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③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즉 주권상장법인은 위 3가지 경우 중 한가지에만 해당하여도 지정사유에 해당함.
  - 재무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 ❖ 3개 사업연도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외감규정 제 12조 제2항),
  -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주권상장법인이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이전 연도도 포함되어 판단될 수 있음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기준을 통틀어 판단하므로 일단 위 기준에 해당한 회사가 다음 1개 사업연도에 추가적으로 재무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기준 미달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나,
    - 3개 사업연도 재무기준 미달로 지정을 받았던 기업이 지정 후 다시 동일 지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지정 이후의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됨.
- ❖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된 회사의 경우, 지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통상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상장법인)가 존속법인이 되고 피합병 비상장법인이 소멸법인이 되므로, 종래에는 이 경우에 합병 전 지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병 전 주권상장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오고 있었음.
  - 그러나 2022.5.3.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동 지정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한 경우에 합병 전 비상장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 전 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에도 합병 전 과거 연도의 지정사유는 소멸된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변경되었음
- ❖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란 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요인으로, 당기 중에 영업활동으로 인해 회사의 현금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

우에도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 이익 계산시 이자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함
- ❖ 회사가 ① 한국거래소에 특례상장한 기술성장기업(기술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으로 거래소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된 기업)이거나, ②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해당하거나, ③ 최근 1년내 신용평가기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등급(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기준, 이와 동등한 타 신용평가기관 등급포함)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나. 직전 사업연도 재무기준 해당회사(폐지)

- ❖ 신 외부감사법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라목)
  - 이에 따라 신 외부감사법 시행당시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①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②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 1 미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영 제14조 제1항).
- ❖ 그러나 동 시행령상의 지정사유는 2020.10.13.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어 폐지되었고, 현재 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른 지정사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은 시행령상 존재하지 아니함.

### 8.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영 제14조 제3항 제1호)

- ✓ 관리종목은 E토l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나, 관리종목 사유가 감사의견 비적정인 경우는 당기 사업연도가 지정될 수 있다.
  - \* 감사의견 비적정인 사유로 한국거래소가 통보하는 경우를 말함
- ❖ 자본시장법 제37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다음 사업연도에 지정대상이 됨(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영 제14조 제3항 제1호)

-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①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정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지정대상선정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9월 1일)에 관리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이 됨.
- ❖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원칙적으로 지정대상선정일의 다음 사업연도가 지정되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하여 한국거래소가 지정대상으로 통보한 것일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9.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영 제14조 제3항 제2호)

- 코스닥시장에 대한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시장상장법인은 지정대상선정일의 다음 사업연도 지정대상이 됨.
  - 다만 감사인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으로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지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10. 주채권은행 기관투자자가 지정을 요청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 주채권은행 또는 수탁자책임을 이행할 기관투자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회사의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회사는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가. 지정요청자

#### 1) 주채권은행

- ❖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의미함(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호),
  -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됨.

## 2)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기관투자자

- ❖ 기관투자자 중 수탁자책임을 이행할 기관투자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의미함
  - 기관투자자란 자산운용사 등 수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자와 이를 점검 또는 관여하는 자산소유자(연기금, 보험회사 등)를 의미함.
  -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 코드)이란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서, 2016. 12. 기업지배구조원, 자산운용업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여 제정한 민간자율규범임.
  - 구체적인 사안에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기관투자자로서 지정요청을 하기 위하여는 외감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규정 제13조 제1항).

### 나. 수탁자책임 이행의 인정요건

- ❖ 기관투자자가 감사인 지정요청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 1)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을 것

- ❖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란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핵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 국내 자본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의미함(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 "주주활동"이란 주로 의결권을 의미하나 반드시 의결권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범위는 기업 경영 전략과 성과, 위험 관리, 지배구조 등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과 이사회 등과의 협의를 포함하며,
    - 주주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2) 주식 100분의5 이상을 1년이상 보유

- ❖ 감사인 지정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5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

#### 3) 회계처리·외부감사적정여부확인행위존재

- ❖ 감사인 지정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 중 하나를 하여야 함

**회계처리·외부감사적정여부 확인 행위**

- ①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 제1항)을 행사하여 회사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다만, 회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해당 청구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
- ②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을 행사하여 이사에게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경우

**4) 주식 계속보유확약**

- ❖ 기관투자자는 감사인 지정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에 금융감독원장이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야촌의 5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겠다고 문서로 확약하여야 함

**다. 지정신청 절차**

- ❖ 주채권은행 및 기관투자자는 법인개황, 지정요건 증빙자료, 지정요청 사유를 기재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 18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정을 신청함.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서에 흠결이 없는지, 지정이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지, 지정 요청 이유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감사인 지정여부를 결정함(규정 제13조 제4항)
  - 금융감독원장은 감사인 지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지정신청인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규정 제13조 제5항)

**11. 감사인 해임절차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9호)**

- ✓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지정대상이 될 수있다.

- ❖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거나 감사인 해임 사유가 발생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하였음에도,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함.
  - 회사는 감사인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감사인의 독립성이 위반될 수 있는 사유(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 －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법 제13조 제1항)
  - 또한,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해임요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함(법 제 13조 제2항).

#### 감사인 해임사유(영 제19조)

- ①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③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④ 외국인투자 회사가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한 경우
- ⑤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감사인 일치를 위한 경우

- ❖ 위와 같은 감사인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는 기존 감사인을 해임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감사인을 해임할 의무도 부담하게 됨
  - 따라서 감사인 해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을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사유가 됨

## 12.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표준감사시간이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6조의2 에 따라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적인 감사시간을 정한 것으로서, 감사인이 적정한 감사품질 유지 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의미함
  - 표준감사시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법상 강제력은 없으나,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를 감사인지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13.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 ❖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은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 법 문언상으로는 대표이사의 교체란 1인 대표가 수인 대표로 되는 경우, 수인 대표가 1인 대표로 되는 경우, 수인 대표 중 1인의 교체·사임·추가 등 일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배구조가 불안정하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해지거나,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가 고려되어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지정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상속, 사망, 실종 등)로 변경된 경우
- ②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으나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예외사유

< 최대주주의 경우 >

-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지배·종속관계, 친족 등 특수관계자들 간 지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대표이사의 경우 >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이사 전원 교체(순차적으로 교체되는 경우를 포함)만 대표이사 변경으로 간주
- 기존 대표이사 1 인은 교체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

❖ 직전 3년간의 변경횟수를 합산하므로 특정 연도에 변경횟수가 과다한 경우 다음 연도에 추가적인 변경이 없이도 지정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나,

- 지정을 받았던 기업이 지정 후 다시 동일 지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지정 후 변경횟수를 기준으로 판단됨

❖ 직전 사업연도란 감사인지정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지정대상선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의미함

- 동 사유는 지정대상선정일의 다음 사업연도를 조기 지정하므로, 통상 지정대상 사업연도의 2기 전 사업연도가 지정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직전 사업연도가 됨



## 14. 주권상장예정법인(영 제14조 제6항 제1호)

✓ 상장예정법인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주권상장에는 우회상장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나, 다음의 회사는 제외됨

### 지정에서 제외되는 상장예정법인

-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 ②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③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 ④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인수목적회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의미함)

### (참고)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개정 전 외감규정에서는 상장예정법인이 지정을 받은 이후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되지 못하여, (상장을 위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에 기지정받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경우,
  -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감사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실무상 "간주지장"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음(구 외감규정 제10조 제3항)
  -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동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에는 지정감사를 계속 받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매년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를 신청하여야 함

- ❖ 상장예정이라는 사실은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15.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영 제14조 제6항 제2호)

- ✓ 감사보수 미지급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 ❖ 감사인은 감사보수 미지급(영 제21조 제1항 제3호, 회사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보수 재계약 미실시(영 제21조 제1항 제4호), 감사자료 미제출(영 제21조 제1항 제5호),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영 제21조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유로 감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유발생 당기에 감사인 지정대상이 됨.

#### 감사인 지정대상 감사계약 해지사유

- ①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21조 제1항 제3호)
- ②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 ③ 감사인(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이 감사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라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 표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21조 제1항 제5호)
- ④ 「상법」 제6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감사 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영 제21조 제3항 제1호)

- 다만, 감사인이 위 ①~③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9월 1 일)이므로, 기한 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어야 함.

## 16.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3호)

- ✓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 등 회사가 외부감사법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 ❖ 회사가 특정 외부감사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됨
  -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됨(규정 제12조 제1항).
  - 경고 이하의 조치란 경고·주의·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외감규정 제26조 제1항 제5~7호)를 의미함
- ❖ 회사가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는 법위반 사유는 다음과 같음

**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기타 범위반 사유**

- ① 회사가 법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법 제8조 제 1 항부터 제5항까지 및 영 제9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 ③ 법 제9조 제 1 항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 ④ 법 제 1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시 준수 사항
- ⑤ 법 제 12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통지·공고
- ⑥ 법 제 13조에 따른 감사인 해임 및 재선임
- ⑦ 법 제 14조에 따른 의견진술권
- ⑧ 법 제21 조에 따른 감사인의 권한
- ⑨ 법 제22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요구 등
- ⑩ 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 17.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요청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4호)

-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감사인 지정이 의뢰된 회사는 지정대상이 됨
  - 현재 관련 법률로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요청이 있음

## 18. 소속 임직원의 횡령 배임(영 제14조 제6항 제5호)

-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상장법인이 소속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회사는 지정대상이 됨
  - 이 경우 소속 임직원에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도 포함되며, 고소나 공소제기 사실이 지정사유가 되므로 이후 재판과정에서의 유·무죄결과와는 관계없이 지정사유가 될 수 있음.
- ❖ 지정대상이 될 수 있는 횡령·배임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과 자산총액을 판단함

###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① 임원 : 자기자본의 1000분의 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천의 25)
- ② 직원 : 자기자본의 10어천의 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 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① 임원 : 자기자본의 1000분의 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 ② 직원 :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분의 3))

## 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① 임원 : 자기자본의 1000분의 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 @ 직원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 19.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부실제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6호)

- ✓ 금융감독원에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 ❖ 법 제 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자산 1천억원 이상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로부터 2주 이내 감사인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이하 "지정기초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7조 제1항)
  - 회사가 영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기초자료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됨

### (참고) 개정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개정전구외부감사법의직권지정사유중소유·경영미분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는 삭제되었음
  - 구 외부감사법상 소유·경영 미분리 사유로 인한 지정은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사례가 많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음.
  - 개정 신 외부감사법은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소유경영 미분리 사유는 주기적 지정사유에 반영하고, 소유·경영 미분리 사유를 직권지정 사유에서 삭제하였음
  -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이유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이 차기에 지정감사인으로 교체되는 결과가 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이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었음

### Ⅲ. 감사인 지정시기

✓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지정사유에 따라 당기 지정과 차기 지정으로 나누어진다

#### 1. 개요

- ❖ 감사인의 지정시기는 지정사유가 발생한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과, 지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한 당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만을 규정하였음.
  - 개정 신 외부감사법상의 지정시기는 차기 지정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지정사유에 한정하여 당기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

❖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지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

- ①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② 주채권은행·기관투자자가 지정을 요청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③ 주권상장예정법인(영 제 14조 제6항 제1호)
- ④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요청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4호)
- ⑤ 감사인 미선임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⑥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사인 부당교체(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⑦ 감사인 해지절차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9호)
- ⑧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2호)

-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또는 주권상장예정법인으로 인한 지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기 사업연도가 지정되지만, 지정대상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영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지정은 원칙적으로 차기 지정사유이나,
  -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니고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한국거래소에서 통보된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를 지정함

### 3.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

- ❖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를 제외한 지정사유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지정사유에 해당됨

####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

- ① 회계처리기준위반이 확인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②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③ 일정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주권상장법인(법 제11조 제1항 제6호)
- ④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영 제14조 제3항 제1호)
  - \*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제외(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 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영 제14조 제3항 제2호)
- ⑥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법 제11조 제1항 제 10호)
- ⑦ 최대주주·대표이사변경(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 ⑧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사(영 제 14조 제6항 제3호)
- ⑨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영 제14조 제6항 제5호)
- ⑩ 지정기초자료 미제출·부실제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6호)

## Ⅳ. 지정대상 기간

- ✓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는 3개 사업연도, 그 이외의 회사는 1개 사업연도이다.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말함

### 1. 개요

- ❖ 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지정사유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였음
  - 개정 신 외부감사법에서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주기적지정대상 회사(코넥스시장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소유·경영미분리 주식회사)는 6년간 연속 자유선임 계약이 이루어진 후 3년간 지정감사를 받게 되었음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종전과 같이 1개 사업연도를 지정하게 되면, 1개 사업연도 후 다시 6개 사업연도를 자유선임 계약할 수 있게 되고,
    - 이 경우 6개 사업연도간 직권지정사유가 없이 자유선임계약을 하고 3개 사업연도(주기적) 지정을 받은 회사보다, 1개 사업연도 감사인 직권지정을 받은 회사가 결과적으로 지정감사 의무기간이 짧아지는 측면이 발생하게 됨

- ❖ 결국 신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지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주기적 지정대상회사(코넥스시장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타 회사는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2.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 ❖ 주기적 지정대상이 되는 회사에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됨(규정 제10조 제1호)
  - 주기적 지정대상회사란 법 제 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를 의미함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50%이상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인 회사)가 주기적 지정대상회사에 해당함(이하 제5장 1.의 2항에서 상술)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에 해당하기 위하여 주기적 지정요건(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선임)까지 모두 해당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함

- ❖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진 후 지정기간 중에 다시 새로운 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이 이루어지게 됨
  - 이 경우 추가 지정대상 기간은 기존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정기간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발생한 지정사유를 기준으로 지정대상 기간을 다시 산정하게 되므로,
    - 기존 감사인 지정기간과 새로운 지정기간이 중복될 수 있으며, 중복된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음
  - 2022.5.3. 외감규정 개정으로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연도 중 법 제 13조 또는 법 제 15조에 따라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감사인이 변경되어 지정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주권상장법인 또는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법인이 감사인을 지정받은 사업연도에 대하여 다시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음
  - \* (예시 '22년~'24년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시 '23년부터 지정대상에 해당할 경우 '23년~'25년의 감사인을 지정(결과적으로 '22년~'25년까지 총 4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 효과)

### 3. 그 밖의 회사

#### 가. 1 개 사업연도 지정

-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1년간 지정을 받게 됨(규정 제 10조 제 1 호,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2항 제2호)

#### 나. 2개 사업연도 지정 등

- ❖ 2개 사업연도 연속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법규위반 사유로 지정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됨
  -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법규위반사유는 ① 감사인 미선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②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③ 재무제표 대리 작성 금지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5호), ④ 감사인 해임의무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9호), 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등(영 제 14조 제6항 제3호), ⑥ 지정기초자료 제출 위반(영 제14조 제6항 제6 호) 등이 될 수 있음
- ❖ 감리결과조치로 인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감리결과조치 내용에 따르게 되므로,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조치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될 수 있음

## V. 감사인 지정절차

### 1. 지정절차의 개관

- ❖ 감사인 지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지정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해당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회계법인에 지정을 사전통지함
  - 이후 회사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을 본통지하게 됨
- ❖ 회사와 회계법인은 본통지 이후에도 재지정사유가 있으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재지정 요청이 타당한 경우 재지정이 이루어짐
- ❖ 시행령 제 17조 제2항 이하에서는 주기적 지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경우에 사전통지 및 재지정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규정 제15조 제1항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은 직권지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정)시에도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하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지정시에도 사전 통지 및 재지정절차가 적용됨.

## 2. 지정대상 회사의 선정

- ✓ 지정사유별로 지정대상 선정일이 상이하며, 지정대상 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정대상 회사여부가 결정된다.

### 가. 개요

- ❖ 감사인 지정을 위하여는 먼저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에 지정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됨
  - 회사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회사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에 지정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이러한 지정사유의 판단기준일을 "지정대상선정일"이라고 함(외감규정 제12조 제1항)
- ❖ 지정대상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정사유 유무를 판단하므로 지정대상선정일 이전에 지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지정대상선정일 도래 전 지정사유가 소멸하였다면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 반대로 지정대상선정일에 지정사유가 존재하였다면, 지정대상선정일 이후에 지정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정대상임
- ❖ 법령상 규정된 지정대상 선정일은 감사인 지정사유에 따라 ① 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②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 ③ 금융감독원장이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 ④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외감규정 별표2)

### 나. 지정사유별 지정대상 선정일

#### 지정사유별 지정대상 선정일

- ① 회사 등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 회사 및 관여미관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 ② 감사인 미선임 회사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 ③ 감사인 부당교체 회사, 감사인 해임의무 위반 회사,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지정기초자료 미채출·부실채출 회사 : 금감원이 지정사유 발생사실을 확인한 날
- ④ 상기 외 회사 : 사업연도 개시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 1) 회사 등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 회사 등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날이 지정대상 선정일이 됨

#### 지정요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정사유

- ①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② 주채권은행·기관투자자가 지정을 요청한 회사(법제11조 제1항 제호)
- ③ 주권상장예정법인 (영 제14조 제6항 제1호)
- ④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요청된 회사 (영 제 14조 제6항 제4호)

### 2)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

❖ 감사인 미선임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로 인한 지정은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째 되는 날의 초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1일)이 지정대상 선정일이 됨

### 3) 금융감독원장이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

❖ 금융감독원장이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에 지정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사유확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정사유

- ①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사인 부당교체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② 감사인 해지절차 위반 (법 제11조 제1항 제9호)
-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영 제14조 제6항 제2호)
- ④ 지정기초자료 미제출·부실제출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6호)

### 4)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

❖ 지정대상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날의 초일에 회사에 지정사유가 존재하는 지를 기준으로 지정대상 여부를 판단함(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지정대상선정일은 9월 1일)

- 다음과 같이 지정대상 선정일의 다음 사업연도 지정(차기 지정)이 이루어지는 사유의 대부분(지정기초자료 미제출·부실제출 회사 제외)이 이 유형에 해당함

#### 9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정사유

- ① 감사인 부당교체(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② 회계처리기준위반이 확인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③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④ 일정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법 제11조 제1항 제6호)
- 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영 제 14조 제3항 제1호)
- ⑥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영 제14조 제3항 제2호)
- ⑦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 ⑧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 ⑨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사(영 제 14조 제6항 제3호)
- ⑩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영 제14조 제6항 제5호)

### 3. 사전통지

- ✓ 회사는 사전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본통지 이전이라도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금융감독원장은 지정통지일(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지정예정 내용을 해당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회계법인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영 제17조 제2항)
  - 개정 전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지정시에 감사인을 복수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외감규정은 이러한 복수지정사유를 삭제하고, 단수로 지정하고 있음
- ❖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통지에 대하여 제출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본 통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전통지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조기계약체결)할 수 있음(규정 시행세칙 제 11조 제1항)
  - 이러한 경우 조기계약이라도 지정처분에 따른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되며, 금융감독원장은 본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통상의 사전통지 제도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본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나,
    - － 지정처분 절차에서의 사전통지 제도는 단순히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조기계약 체결)에 따라서는 지정 본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됨

### 4. 의견제출

#### 가. 개요

- ❖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제출받은 의견이 재지정 요청사유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타당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외감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가 적법절차원칙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지정처분의 적법·타당성 전반에 대하여 가능하고, 의감규정상의 감사인 재지정 사유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

- 의감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에 대한 재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나. 사전통지에 대한 재지정 사유

##### 1) 외국인 투자회사가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한 경우

- ❖ 해당회사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외국인투자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의미하고, 외국인투자자에서 개인은 제외됨(영 제17조 제7항 제1호)

##### 2)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회계법인

-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이 등록 이후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함(영 제17조 제7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1호)

##### 3) 수시·사업보고서부실기재회계법인

- ❖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수시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함(영 제17조 제7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3호)

##### 4) 지정기피 회계법인

- ❖ 지정을 받은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지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영 제17조 제7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4호)

##### 5)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으로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

- ❖ 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 회사에 감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사가 감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영 제17조 제7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5호)

##### 6)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회계법인

-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공인회

계사법 제33조 제1항)

- 지정감사인으로 예정된 회계법인에 다음과 같은 직무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지정 사유에 해당함

- ①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회사
- ② 회계법인의 사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회사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회사
  3. 자기 또는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4. 자기 또는 배우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회사
  5.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6. 공인회계사 업무 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공인회계사 직무의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회사
- ③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회사
- ④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회사  
( \* 예금거래등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14조제1 항제호단서에서정하는채권·채무 제외)
- ⑤ 다음 어느 하나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
  1.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2. 공인회계사 업무 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공인회계사 직무의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 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회사
- ⑥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회사등

**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용역(종속회사 포함)**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및 자산 등의 매도·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단,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제외)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투자관련알선및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등

## 6) 윤리규정상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가 따라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데, 직업윤리규정에는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와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
  - 지정감사인으로 예정된 회계법인에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직업 윤리규정에서 정한 독립성이 훼손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지정 사유에 해당함(영 제17조 제7항 제4호 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2호)

## 7) 회계법인 지정군 변경요청

- ❖ 회사 및 감사인 후보 회계법인은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각 4개군으로 분류되는데, 회사 및 감사대상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회사가 속한 군 이상의 군의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됨

< 회사의 지정군 구분 기준 >

구분	구분 기준
가군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나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다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5천억원 미만인 경우
라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 회계법인의 지정군 구분 기준 >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능력	
가군	5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0억원 이상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회계법인으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
나군	1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억원 이상	
다군	4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10억원 이상	
라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 ❖ 감사대상 회사는 지정감사인으로 기통보된 회계법인보다 상위 지정군(영 제17조 제7항 제4호, 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3호) , 하위 지정군(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4호), 동일 지정군(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5호)의 회계법인으로 재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재지정 사유에 해당

- 다만 상·하위, 동일 지정군 재지정 요청은 사전통지와 본통지를 포함하여 1회만 가능함

❖ 상위 지정군의 회계법인을 재지정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속한 군과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을 선택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규정 별표4)

- 상향 재지정 요청시 재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속한 군은 회사가 속한 군보다 높은 군 중에서 가·나·다·라군이상으로 범위를 정하여 선택하여야 하고, 특정 군만을 요청할 수는 없음(예 : 라군회사가 다군 회계법인을 기지정 받은 경우, 다군 이상으로 재지정 요청은 가능하나, 다군만으로 재지정 요청은 불가능)

< 지정군 상향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 경우 >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나군	가군	-	-
다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 하위 지정군의 회계법인을 재지정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속한 군과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을 선택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규정 별표4)

- 하향 재지정 요청시 재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속한 군은 회사가 속한 군보다 높은 군 중에서 나·다·라군 이상으로 범위를 정하여 선택하여야 하고, 특정 군 하나만을 요청할 수는 없음(예 : 라군회사가 나군 회계법인을 기지정 받은 경우, 라군 이상으로 재지정 요청은 가능하나, 라군만으로 재지정 요청은 불가능)

❖ 종전의 지정군 하향 재지정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정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하향 재지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9.29. 외감규정 개정을 통하여 하향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정사유를 제한하였음(외감규정 제15조 제5항 제4호)

- 하향 재지정이 허용되는 지정사유는 ①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② 주기적 지정을 받는 경우(법 제11조 제2항 각호), ③ 주권상장예정법인(영 제14조 제6항 제1호)에 한정됨.

< 지정군 하향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 경우 >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나군	-	-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
	나군	-	다군	-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군	-	-	라군

8) 동일 지정군 내 재지정 요청

- ❖ 종전 외감규정은 지정군의 상하향 변경을 전제하는 재지정 요청을 규정하였고 동일 지정군 내 재지정 요청은 두고 있지 않았으나, 회사의 감사보수 협상력 제고를 위해 2022.9.29. 외감규정 개정을 통하여 동일 지정군 내 재지정을 허용하였음
  - 동일군 재지정 신청의 경우 지정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회사 가군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동일 지정군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 경우 >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	-	-	라군

9) 모회사간 감사인 일치

- ❖ 연결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재지정 사유에 해당함(영 제17조 제7항 제4호, 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6호)



- 다만 지정감사인과 일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자유선임 감사인과 일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지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규정 시행세칙 제16조)

#### 10) 회생절차에 따른 감사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의 허가 등으로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지정사유에 해당함(영 제17조 제7항 제4호, 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7호)

#### 11) 기타 법령상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개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재지정 사유에 해당함(영 제17조 제7항 제4호, 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8호) .

## 5. 본통지(지정처분)

- ✓ 지정통지(본통지)를 받는 경우 회사 및 감사인은 지정감사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 금융감독원장이 회사 및 감사인에게 지정을 통지하는 날이 지정기준일로 정의되며, 이는 본 통지일이자 지정처분일을 의미함(영 제15조 제5항 제1호)
  - 회사는 지정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받은 날(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법 제11조 제4항)
- ❖ 감사인 지정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유감사 계약시와 달리 감사계약을 위하여 감사인 선정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법 제10조 제7항 제1호, 제4항),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선정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음
  - 회사가 지정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행정 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이 외부감사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 지정감사인 통지를 받은 회계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은 해당 회계법인을 1년간 지정감사인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음(영 제16조 제2항 제4호, 규정 제14조 제9항 제4호)

## 6. 재지정

### 가. 개 요

- ❖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앞의 4의 나항에서 상술한 사전통지에 관한 재지정 사유와 동일함)가 있는 경우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 앞서 설명한 사전통지 제도와 재지정요청 제도는 재지정 요청사유에 관하여는 규정 내용이 동일하나,
  - 사전통지 제도는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권리보장 제도인 반면 재지정요청제도는 적절한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어 취지상 차이가 있음

### 나. 재지정절차

- ❖ 재지정 요청이 있고 그 요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반영하여 재지정을 하며, 기타 재지정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함
  - 재지정을 받은 이후 재지정된 감사인 등에도 직무제한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지정 요청을 다시하고(재재지정요청), 이에 따라 다시 감사인 후보를 변경하여 재지정(재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제5장 감사인의 지정(下) - 주기적지정

### 1. 주기적지정제도

#### 1. 개요

- ❖ 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은 회사에게 특정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인 지정처분이 이루어졌음
  - 그 결과 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선호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만 감시를 받거나, 특정 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감사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 개정 신 외부감사법은 주기적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6개

사업연도까지 자유선임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고,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감시를 받도록 하였음.

< 주기적 지정제도의 개요 >



## 2.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주기적 지정제가 적용된다.

### 가.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은 주기적 지정대상이 되나, 코넥스 상장법인은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됨(영 제 15조 제2항)

### 나. 소유·경영미분리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주식회사로 볼 수 없다.

❖ 비상장회사가 다음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사유가 되며, 실무상 이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라고 지칭하고 있음(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으로 보는 3가지 요건(3가지에 모두 해당)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 F/S)이 1천억원 이상
- ②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의결권 있는 주식)이 50% 이상
- ③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X佐邊총액이1 천억원이상

❖ 직전 사업 연도 말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함

2)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 대주주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의미하고,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의미함(영 제 15조 제4항)

○ 지분의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특수관계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합산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

- 다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동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지정 기초자료 제출기간 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3)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회사

-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므로(규정 제 15조 제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주주일 것이 요구됨
  - 결국 법인세법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로 볼 수 없음
  - 동 요건의 해당여부도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회사가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의 2) 의 경우와 같음

## II. 주기적 지정요건

✓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선임 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요건에 해당된다.

- ❖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기적 지정대상이 됨

### 1.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란 자유감사 계약이 지정감사계약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경우(역법적으로 연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 연속하는 사업연도 중간에 지정감사 계약이 들어가 있으면, 그 지정감사 계약 종료 후에 다시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유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동 요건을 만족하게 됨
- ❖ 주기적 지정제는 2019. 11. 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되나,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법 시행일 이전 사업연도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 법 시행일 이전의 자유선임계약 기간도 주기적지정제 요건 산정기간에 포함됨(법 부칙 제 8조)

## 2. 자유선임 계약 체결

-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자유선임을 의미하며, 법 시행 이전의 자유선임 계약 기간도 포함하는 부칙 제8조의 취지상 구 외부감사법상의 감사인 자유선임도 이에 포함됨
- ❖ 6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유선임 계약이 체결되면 족하고 6개 사업연도 기간 중 감사인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 ❖ 6개 사업연도 기간의 자유선임 감사는 반드시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
  - 따라서 6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자유선임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족하고 회사가 해당 6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상장법인 또는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 Ⅲ. 주기적 지정의 면제

### 1. 개요

- ❖ 주기적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라도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고 있음
  - 면제유형은 ①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회사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2. 6년 이내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발견

- ✓ 과거 6년 이내에 무혐의 등의 감리결과가 있는 경우 주기적 지정이 면제될 수 있다

#### 가.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회사

- ❖ 회사가 과거 6년 이내 감리를 받은 때란 6년 이내에 감리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함
  - 회사가 차기 주기적 지정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지정대상선정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6년 이내에 감리결과가 확정된 경우임

- ❖ 감리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행하는 감리를 의미하며 여기서 재무제표의 심사는 제외됨

#### 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발견

- ❖ "회계처리기준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를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다만 경미한 조치(경고, 주의)가 내려진 경우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 ❖ 결국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결과가 확정되어 감리결과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경우를 주기적지정 면제대상 기업으로 볼 수 있음

### 3. 감리신청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발견

- ✓ 6년간 감리가 없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없는 회사는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주기적 지정면제를 위한 감리를 신청할 수 있다.

#### 가. 개요

- ❖ 통상 감리주기는 6년을 넘기 때문에 회사가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리를 신청하는 제도도 신설되었음
  - 다만 모든 회사에게 감리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회계 취약점 미발견 등의 감리신청 요건을 갖춘 회사에게 신청권한이 부여되며,
  - 감리신청은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할 수 있음

#### 나. 감리 신청요건

- ❖ 감리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1) 6년 이내 감리를 받지 않았을 것

-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가 주기적 지정을 통지하는 날(지정기준일)로부터 6년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를 받지 않은 경우이어야 함
  - 감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기적 지정 면제를 위하여 신청한 감리는 제외됨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것

- ❖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 포함)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어야 함

## 3) 감사인 미선임확약서 제출

- ❖ 위 2)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함

## 4)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신청

- ❖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하여야 함(규정 제15조 제7항)

# IV. 주기적 지정절차

## 1. 주기적 지정절차의 개관

- ✓ 주기적 지정절차는 직권지정의 지정절차와 큰 차이가 없다.

- ❖ 주기적 지정의 절차도 제4장에서 설명한 직권 지정의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짐

- ❖ 주기적 지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지정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해당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회계법인에 지정을 사전통지함
  - 이후 회사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을 본통지함

- ❖ 회사와 회계법인은 본통지 이후에도 재지정사유가 있으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재지정 요청이 타당한 경우 재지정이 이루어짐

- ❖ 주기적 지정의 지정대상 선정일은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9월 1 일)임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므로,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됨

- 다만 3개 사업연도 지정의 경우에도 지정통지는 매년 1회씩 총 3회 이루어짐

## 2. 주기적 지정의 연기

- ✓ 법 시행(2019.11.1.)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이 있거나 감리중인 경우 등 주기적 지정 연기 사유에 해당되면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다

\* 주권상장법인, E胞비상장주식회사등은와부감사법상와 연속감사계약체결의무가있음

### 가. 개요

- ❖ 주기적 지정의 연기관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기기간 동안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 연기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주기적 지정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다시 판단하여 주기적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주기적 지정의 연기는 실질적으로는 연기기간 동안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됨

### 나.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

- 1) 법 시행 전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 주기적 지정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사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주기적 지정이 연기됨
    - 주기적 지정제는 2019.11. 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0사업연도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최초로 적용되므로, 주기적 지정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는 2019사업 연도임
    -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9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가 연기사유가 되고,
      - 통상 2018~2020사업연도 또는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 ※ 주기적 지정이 연기되는 계약은 2019.11.1. 이전 시작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감사계약이므로 감사계약 체결 시기가 2019.11.1. 이전일 것이 요구되지는 않음
  - ❖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계약이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경우인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체결한경우를의미하므로
    - 1개 사업연도 계약이 가능한 비상장회사가 임의로 3개 사업연도를 감사계약한 경우는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함

## 2)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 ❖ 해당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진행중인 기간에는 주기적 지정이 연기됨
  - 주기적 지정 면제를 위하여 감리가 신청된 경우에도 해당 감리기간동안 주기적 지정이 연기됨

## 3) 지배·종속회사간지정대상사업연도일치

- ❖ 금융감독원장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들(회사집단)이 주기적 지정대상인 경우 먼저 지정받는 회사의 지정시기를 2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
  - 동 사유로 인하여 지정연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회사가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함

### 지정대상 사업연도 일치를 위한 연기사유

- ① 회사집단 내 회사들 간에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달라서 회사집단의 경영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 ② 회사집단 내에서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비교적 낮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를 앞당기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분산지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 ❖ 주기적 지정제의 요건이 되는 6년 연속 자유감사계약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전의 계약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은 주기적 지정시행 첫해에 6년 연속 자유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주기적 지정제는 6년 자유감사계약 후 3년 지정감사계약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연도에 지정감사계약이 집중되면 주기적으로 계약 집중현상이 반복될 수 있음
- ❖ 주기적 지정제 시행 첫해부터 지정대상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대상 기업이 과다한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의 지정시기를 연기하여 매년 고르게 주기적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8년간의 연평균 지정회사수를 고려하여 평균 지정대상 회사수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지정을 연기하여 지정시기를 분산하게 됨
- ❖ 지정하는 회사수가 일정하게 되도록 분산하여 다음연도로 지정을 연기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지정이 연기된 회사부터 우선 지정하며, 나머지는 해당연도 지정대상회사 중 자산규모가 큰 순서대로 지정

#### 주기적 지정 분산기준

##### ① 직전 사업연도 연기 회사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인 경우는 우선 지정대상이 됨. 연기 이후에도 주기적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연기 이후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가 아니게 된 경우 (상장폐지, 자산 1천억원 미만으로 감소, 소유·경영분리 등)나 진행 중인 감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 없이 종결된 경우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아니함

##### ② 자산총액이 큰회사

①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정한 다음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가 우선 지정대상이 됨

## 제6장 감사인의 해임변경

### 1. 감사계약의해지

- ❖ 감사계약은 회사와 감사인간의 민사계약인데, 통상의 민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결되고 유지 여부도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나 외부감사법상 감사계약은 체결이 강제되어 있음
  - 자유선택계약이란 계약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계약체결 여부는 강제되는 것임
- ❖ 외부감사법의 목적은 회사가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의무란 단순히 감사인을 선임할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임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의무까지 포함함
  - 그러므로 외부감사법은 문언상으로는 감사계약의 체결(감사인 선임)만을 강제하고 있으나, 회사는 감사계약의 체결의무 뿐만 아니라 계약을 유지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음
- ❖ 감사계약의 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감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외부감사법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감사인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나누고,
    - 이를 당기 내에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3년 연속 계약 중 잔여사업연도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 II. 회사의 감사인 해임

- ✓ 회사는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 1. 사업연도 중 회사의 해임사유

#### 가. 감사인이 직무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 회사는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의 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 지체없이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감사계약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함(법 제13조 제1항)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회사의 해지권한을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의무이기도 함
    - 따라서 직무제한 사유가 있는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지정사유가 될 수 있음

#### 나. 감사인의 감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 감사인에게 해산 등 감사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 내 감사인 선임의무 및 3년 동일 감사인 선임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법 제10조 제7항 제2호),
  - 감사인 선임 기한 이후에도 기존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다만 회사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법 제10조 제8항)

- ❖ 해임사유가 되는 해산 등 감사수행이 불가능한 사유란 다음과 같음(영 제13조 제2항)

#### 해산 등 감사수행이 불가능한 사유

- ①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
- ②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등록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③ 감사인인 감사반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효력상실된 경우
- ④ 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상 징계로 등록취소되거나 직무정지되는 경우
- 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⑥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로 인해 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⑦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해산 등 감사수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규정되어 있으나, 미등록한 감사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감사인 해임사유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계법인인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미등록한 경우에도 해임사유로 볼 수 있음

#### 유의사항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의 감사수행이 불가능하여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2.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의 해임사유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경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함
- ❖ 동 규정에 따른 해임은 3개 사업연도 중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만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 해임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시점에서 이미 종료된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는 해임이 요청된 기존 감사인이 수행함
- ❖ 감사인의 해임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의 해임을 요청한 경우이어야함

- 위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 해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음(영 제19조)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

- ①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③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④ 외국인투자 회사가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한 경우
  - 외국인투자자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의미함
  - 해당회사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인투자자에서 개인은 제외됨
- ⑤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감사인 일치를 위한 경우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에 지정감사인인 있는 경우 다른 회사(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는 그 지정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는 의미임

**유의사항**

□ 3개사업연도 중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만을 해지하는 것임

※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해임이 요청된 감사인이 수행함

### Ⅲ.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감사인도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외부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 감사계약은 민사계약에 해당하나 감사인은 감사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를 감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게 됨
- 위와 같이 감사인은 감사인으로서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사인도 감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 외부감사법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당기 내에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3년 연속 계약 중 잔여 사업연도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감사인은 위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후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 해지보고서 첨부자료

- ①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감사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

## 1. 사업연도 중 감사인의 해지사유

- ❖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하고 이를 해지기한이 있는 사유와 해지기한이 없는 사유로 나누고 있음

### 가. 해지기한이 없는 사유

- ❖ 감사계약이 해지된 회사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함(법 제 10조 제8항)
  - 또한 감사인은 감사계약 해지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규정 제 17조)

#### 1) 감사인의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 감사인이 다음 자격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해지사유가 됨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만이 될 수 있음(법 제 9조 제1항)
  - 또한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사유(공인회계사법 제33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

#### 2) 독립성 훼손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함

## 나. 해지기한이 있는 해지사유

- ❖ 해지기한이 있는 해지사유는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이 속하는 달의 초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9월 1일)까지가 해지기한이며, 해지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동 사유로 인한 해지는 불가능함

-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가 지정함
  - 감사인은 해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음

### 1) 감사보수 미지급 등

- ❖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임

### 2) 감사보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임
- ❖ 해당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감사보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란 일체의 감사보수 재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 회사에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사유가발생하여 이에 따라 체결되는 감사보수 재계약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3)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청 미협조

- ❖ 감사인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감사인인 경우에만 동 사유로 인한 해지가 가능함
  -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감사업무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도 포함됨

## 2.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의 해지사유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해당 회사의 감사인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다만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개 사업연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수있음
  - 이 경우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 3개 사업연도 중의 해지란 3개 사업연도 중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만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함
  -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 유의사항

- 3개 사업연도 중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간을 해지하는 것임  
※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감사계약을 해지한 감사인이 수행함
- ❖ 해지사유가 되는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는 등의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감사의견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 ❖ 감사인이 이사·감사·감사위원회위원 등에 해당하는 자(상법 제635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 동 사유로 인한 감사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가 지정함

###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발견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통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어야 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는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 동 사유로 인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함



## 제7장 재무제표의 작성제출

### 1. 회계처리기준

-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 ✓ 다만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1. 개요

- ❖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은 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② 그 밖에 외부감사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나눌 수 있음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에 선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외부감사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적용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회사

#### 가. 주권상장법인

- ❖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을 의미

#### 나. 상장예정법인

-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를 의미하며,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됨

#### [참고] 코넥스시장 관련 외감법상 특례 규정

- 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동 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의무면제
- ②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 단, 코넥스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
- ③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 다. 금융지주회사등

- ❖ 금융지주회사 은행, 금융투자업자 투자개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업자가이에해당함

## 3. 별도재무제표 작성의무

- ❖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영 제 6조 제 2항)
  - 시행령은 위 규정을 통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도 작성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 II. 재무제표의작성및제출

### 1. 재무제표의 작성

- ✓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의미한다.

#### 가. 재무제표의 종류

- ❖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注釋)을의미함(법 제2조 제2호)
  -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는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재무제표인 결산재무제표임
  - 이러한 결산재무제표만이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인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분기재무제표는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이 아니므로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8. 7.10. 선고 2008도4068 판결)

#### 1) 재무상태표

- ❖ 재무상태표는 상법상 결산기마다 이사가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상법 제447조, 제579조) 대차대조표와 동일한 개념임

##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한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적을 표시하는 서류로서 그 기간 동안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대비하여 산정한 경영손익을 표시함

## 3) 자본변동표

- ❖ 자본변동표란 자기자본계정의 변동상황을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는 자기자본의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을 의미함(기업회계기준서 1001호 문단106)

## 4) 현금흐름표

- ❖ 현금흐름표란 일정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서류임(기업회계기준서 1007호 문단10)

## 5) 주식

- ❖ 주식은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과 금액의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제공되는 서류임

## 나. 연결재무제표

- ❖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을 의미함

## 다. 지배·종속의관계

- ✓ 지배·종속의관계는회계처리기준에따라판단한다.

## 1) 개요

- ❖ 지배·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회사간에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지배·종속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판단함

## 2) 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상의 내용

- ❖ 개정전 구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지배·종속의 관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배회사는 외부감사 대상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상장회사 등에 해당하는 회사를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음(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4항)
- 또한 지배·종속의 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 지배회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며(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 조의3 제6항),
  - 이에 대하여 최상위지배회사, 자산총액이 최대인 회사를 지배회사로 하였음(구 규정 제 6조 제2항)
- 외부감사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위 예외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신 외부감사법은 지배·종속의 관계를 개정 전 외부감사법보다 넓게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음

## 라. 재무제표 등 대리작성 금지

- ❖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음
  - 만약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감사인은 자기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결과가 되므로 외부감사의 의미가 퇴색됨
    - 이에 따라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대리작성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에 응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에는 회사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위 만으로도 제재대상 및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취지는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감사인은 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감사인일 뿐, 감사를 담당하지 않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단순히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해당 회사의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 ❖ 금지되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영 제8조 제6항)

**금지되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행위**

- ①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 ②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 ③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 ④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2 감사 전(前) 재무제표의 제출****가. 개요**

- ❖ 회사가 다음과 같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음(법 제44조 제1호)

**1) 감사인에 제출**

- ❖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 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을 강제하는 취지는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감사기간이 확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에 있음
  - 감사 전 재무제표는 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취지에 부합함
-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

**2)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즉시 동일한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6조 제4항, 영 제8조 제3,4,5항)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

## 나. 제출시기

- ✓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전, 연결재무제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는 정기총회 개최 4주전까지 회사가 감사인·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다.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1) 원칙

- ① 재무제표 :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 ② 연결재무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 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 ❖ 개정 외부감사법은 회사가 정기총회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에 개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들의 정기총회 분산개최가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구체적인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음

- ① 재무제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 ② 연결재무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 3. 결산 재무제표의 제출

- ❖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를 승인 받은 재무제표를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23조 제13항)
  -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영 제27조 제5항)
- ❖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를 승인 받은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당해 회사는 재무제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3항)

## III 감사보고서의제출

### 1. 감사보고서의 제출

-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음(법 제4조 제3호)

### 2. 회사에 대한 제출기한

- ✓ 감사인은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음
  - 다만 개정 외부감사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가. 원칙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위 ①의 기한과 동일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증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전(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함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위 ①의 기한과 동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위의 ②항과 동일함(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자산 2조원 이상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3.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기한

- ✓ 감사인은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음
  -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
  - ②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위 ㉠의 기한 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증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



## 제8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 1. 내부회계관리제도란?

- ❖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함
- ❖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 회계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03년 12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부감사법으로 이전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하였음
-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 ②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③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 ④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 ⑤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 ⑥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
- ⑦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 ⑧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였는지 등 포함) 보고의 기준 및 절차
- 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 ⑪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⑫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회사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나. 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 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른 조사·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마. 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른 조사와 관련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II.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

-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이며,  
- 유한회사,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특수목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1. 적용대상 회사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은 ① 주권상장법인과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임

### 2. 적용예외

#### 가. 개요

- ❖ 개정 신 외부감사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유한회사 및 회사의 특성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필요성이 적은 특수목적법인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 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의 내용

□ 종전 구 외부감사법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만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제외 회사로 규정하고 있었음

#### 나. 유한회사

- ❖ 유한회사는 개정 신 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었음(영 제9조 제1항 제1호)
-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요구할 필요성은 적음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 제도가 없고, 감사도 임의기관이므로 이사회 구성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운영실태를 이사회에 보고

할 수 없음

#### 다. 특수목적회사

- ❖ 특수목적회사(SPC)와 같이 상근 임직원이 없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곤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영 제9조제1항 제2호)
  - 특수목적법인은 통상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폐이퍼컴퍼니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됨
  - 대부분의 특수목적법인은 설립근거법상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어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한 법률의 준수가 불가능함
  - 또한 특정자산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단순하고, 외부 사무관리회사에 회계업무를 위탁하여 자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 개정 신 외부감사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예외인 특수목적법인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회사가 규정되어 있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회사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조항의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부회계적용 제외회사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추가하였음
  - 결국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제외 회사가 됨
  - 법인세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투자회사(1~8호)를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회사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의미함

####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 ❖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는 적용이 제외되나, 현재 이에 해당하는 회사가 고시된 내용은 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예외 회사 >

	전면개정전	전면개정('18.11.1. 이후)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법인</li> <li>•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개별회사기준)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li> </ul>	좌 동
적용예외	예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한회사</li> <li>•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3 제1항에 따른 회사</li> </ul>

		• 그 밖에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회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	--	--

### 3.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

- ✓ 회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023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가. 개요

- ❖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상장·공시·회계감리 등 관련제도 전반이 연결재무제표중심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기업 단위로 운영되고 있었음
- ❖ 개정 외부감사법은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음(영 제9조 제2항 제6호)
  - 이에 따라 연결중심 공시체계 등과 일관성이 있도록 상장회사가 연결 실체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음

#### 나. 적용시기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의 재무정보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는 종속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의 시기는 상장회사 자산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차적용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

- ① 직전 사업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2023 사업연도
- ②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 : 2024 사업연도
- ③ 전체 상장회사 : 2025 사업연도

- 종래 신 외감법 시행당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의 적용시기는 2022 사업연도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2021.12.21.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과 같이 1년씩 유예됨
- ※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가 2019년도부터 순차적용되므로 상장회사는 2023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감사를 받게 됨

### Ⅲ. 운영실태보고·평가·공시

#### 1. 운영실태 보고

- ✓ 대표자가 직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감사·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개요

-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대표자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 별도의 상근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였음
  - 개정 외부감사법은 대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직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감사뿐 아니라 주주총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였음(법 제8조 제4항)
  -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한 경우(영 제9조 제4항)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음

#####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보고하여야 함
- ❖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영 제9조 제4항)

#####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 ②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①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 ③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 ㉠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 ㉡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 2. 운영실태 평가

-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각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개요

- ❖ 회사의 감시(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함
  - 종래 내부감사는 경영자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불명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실태평가를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요 논의내용을 문서화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강화하였음

### 나. 운영실태 평가

-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각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야 함(영 제9조 제7항)
  -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검토사항을 문서(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로 작성·관리하여야함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작성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보고서에 작성할 사항

- 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3. 공시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대상이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공시사항도 추가되었다

- ❖ 개정 신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 뿐 아니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음(영 제9조 제9항)

※ 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사항

- ①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 또한 회계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시사항 외에 회계담당자의 교육이수 현황, 근무경력 등을 추가로 공시하여 정보이용자 또는 투자자가 회사의 회계역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음(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및 감사

- ✓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019 사업연도부터 '감사'로 상향되었다.

### 1. 개요

-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 등을 "검토"받아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음
  -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확신정도가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는 '검토' 수준으로 형식적인 검증을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 개정 외부감사법은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과거의 소극적인 "검토"에서 적극적 확신을 표명하는 '감사'로 상향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인증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상장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2019년 감사부터 다음과 같이 순차적용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적용시기

- ① 직전 사업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2019 사업연도부터
- ②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이상 상장회사 : 2020 사업연도부터
- ③ 직전 사업연도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 : 2022 사업연도부터
- ④ 기타 나머지 상장회사 : 2023 사업연도부터\*

\* 다만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가 2023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이후 상장회사는 개별회사 및 연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받게 됨

##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내용

- ❖ 외부감사인은 기존에 수행했던 질문 위주의 절차가 아닌 문서검사, 재수행등 강화된 절차를 수행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표명함(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
  - '검토'는 회사가 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만,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의 효과성과 운영실태보고서를 모두 감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범위가 연결실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범위도 연결실체 중심으로 확대됨
    -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견은 연결기업에 대하여 의견표명이 이루어지게 됨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내용 >

	전면개정전	전면개정('19년부터 순차적용)
감사인수행절차	○ 질문 및 제한된 문서 확인(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 질문,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 등(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감사인 인증수준	○ 검토 (소극적 확신) - 의견 예시 :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함"	○ 감사 (합리적 확신) - 의견 예시 : "감사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설계운영체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는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감리할 수 있음



## 제9장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제도

### I. 감사인 등록제도란?

-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다.
  - \*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시에도 감사인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지정
- ❖ 개정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였음(법 제9조의2 제1항)
  - 등록감사인만이 감사할 수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함
  - 상장법인을 감사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가 불가능함
    - 등록요건은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 외감규정 별표 1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음(후술하는 II.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참조)
  -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의 지정감사인도 될 수 없음
    -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지정함
  - 회계법인은 등록이 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정제외 점수가 부과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II.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개요 >

구 분	등 록 요 건(요약)
1. 인력	가. 감사가능 등록회계사 수 : 상시 근무 40명 이상(단, 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 나. 대표이사 경력기간 : 10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 7년 이상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관리업무만을 수행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경력 5년 이상 회계사로 품질관리업무만 전담)

	공인회계사 수	40~70	71~100	101~300	30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 100명 초과인원× 2%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	6명 + 300명 초과인원× 1%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
2. 물적 설비 및 업무 방법	가. 통합관리체계 (인사, 자금, 회계, 내부통제, 감사업무수입, 품질관리 등 경영전반) 구축 운영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대표이사 등을 효율적으로 견제) 다. 독립성 점검 관리 체계 구축운영 라.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 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마.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구축운영 바. 감사업무 관련 정보(감사조서 등)의 관리체계 구축운영				
3. 심리 체계	가. 심리담당자 자격요건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5년 이상 공인회계사 나. 심리 대상 범위 방법 절차, 심리담당자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 규정화 다. 필수 사전심리대상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회사 등 라. 사후심리 : 감사업무 수행이사 중 30% 이상 마. 심리결과 문서화 :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4. 보상 체계	가. 이사 성과평가 : 감사업무 품질평가지표* 비중을 70% 이상 * ❶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조치 유무, ❷ 심리결과 및 내부규정 준수여부, ❸ 투입시간, 독립성점검결과, ❹ 교육시간, ❺ 함께 감사업무 수행한 자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회계법인이 자율결정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평균연봉 : 소속 회계사 평균 연봉 이상				

## 1. 인력에 관한 사항

### 가. 등록공인회계사수

- ❖ 상시근무하는 등록 공인회계사(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 외지역인 경우)의 경우에는 등록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허용됨
    - 지방회계법인 대부분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20명 이하이며 회계법인이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회계법인의 합병이 어렵고,
    - 지방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외를 허용

## 나. 대표이사등 경력

- ❖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7년 이상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5년 이상의 경력기간을 갖추어야 함
  - 경력기간이란 외부감사법에 따른 실무수습 이후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함

## 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인력

- ❖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은 품질관리제도 설계, 감사보고서 심리, 관련 교육훈련 등 외감규정에서 정한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함
  - 감사보고서의 심리란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의미함
-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를 일정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 업무담당자의 수는 다음과 같음  
< 규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담당자의 수 >

공인회계사 수	40명~70명	71명~100명	101명~300명	301명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담당임원 제외)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림)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림)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가. 통합관리체계 구축

- ❖ 감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 체계(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국내 회계법인의 상당수는 '독립채산제'(법인내 감사조직들이 각각 수입한 감사 건 관련 수입·지출을 자체관리하고 법인에는 할당받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영)로 운영되기 때문에 품질관리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감사업무의 신뢰성 확보 등

- ❖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감사기구 운영규정 등)를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전문성확보 감사투입시간 측정감사조서 관리 등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함

## 3.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 가. 심리체계

-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하고,
  - 심리의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 전에 심리를 하여야 하며,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하여야 함
  - 또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나. 보상체계

- ❖ 감사역량이 높은 인력이 회계법인 내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감사업무수행 이사의 성과측정 지표의 70% 이상을 감시품질 관련 항목(감사보고서 심리결과, 외부감사 업무투입 시간, 교육시간, 행정조치 유무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소속 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평균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 Ⅲ. 감사인 등록절차

#### 1. 등록신청

-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신청인)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1조 제1항)
  - 감사인 등록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등록신청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함께 제출함
  -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하여야 함
    - 등록요건에 관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름

#### 2. 등록심사

-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등록심사를 금감원장에게 의뢰하고,
  - 금감원장은 등록신청서 검토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등록거부사유 및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면서, 필요시 신청인에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4개월(심사기간)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영 제11조 제2항)하나, 다음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외감규정 제8조 제9항)

#####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 ①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 기간(보완요구일~보완자료 제출일)
- ② 금감원 자료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기간(자료요구일~자료제출일)
- ③ 금감원이 신청인에 현장조사를 요구한 날부터 현장조사에 대한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 ④ 신청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그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⑤ 금감원이 등록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예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
- ⑥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심사결고일자 접수받은날부터등록을결정하는날까지의기간

#### 3.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 ❖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장의 등록심사결과를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한 후 등록심사결과

를 회계법인에 통보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

- 등록감사인은 등록 이후에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일부취소(법 제29조 제3항 제 1,2호)의 조치를 받는 경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Ⅳ.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의 효과

- ✓ 미등록감사인은 2019.11.1 .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를 할 수 없다.
- ❖ 감사인 등록제 시행 이후 미등록 회계법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는 금지됨
  - 감사인 등록제 시행 이후에는 미등록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은 3개 사업연도 연속 계약의 무와 관계없이 해지 대상이 되고, 상장법인은 등록 회계법인과 다시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미등록 회계법인이 감사인 등록제 시행 이전에 상장회사 등과 3개 사업연도 연속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감사인 등록제 시행 이후에는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
- ❖ 2019. 1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가 가능함
  - 20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감사계약 체결시점 등록여부로 판단
    -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회사(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는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함
- ❖ 상장법인 감사인 미등록 회계법인은 감사인 등록제 시행 이후의 사업연도의 지정감사인도 될 수 없으므로,
  - 상장법인의 지정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 제10장 심사·감리제도

### I. 심사·감리제도의 개요

#### 1. 심사·감리의 의의

- ✓ 감리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기준의 법령 기준 위반 여부 조사업무, 심사는 회사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조사 및 수정공시권고 업무이다.

#### 가. 심사·감리의 의의

- ❖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임
- ❖ 외감규정상 심사는 회사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 수정공시권고하는 업무임
  - 개정 외감규정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회계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감리제도와 별도로 간이한 감독절차인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음(2019년 4월 1일부터 실시)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동 위반사항의 수정공시권고를 통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과실(증과실 제외)로 인한 비반복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공시권고를 이행시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경고·주의)로 심사를 종결할 수 있음

#### 나. 심사·감리의 법적 성질

- ❖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 ※ 심사의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등의 근거 규정은 없으나, 필요시

심사대상자의 임의협조를 받아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있음

## 다. 심사·감리결과조치와의구별

-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치를, 금융감독원장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치(경고, 주의, 위법상태 시정·위법행위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음
  - 감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법령·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업무(심사는 재무제표를 조사·확인하는 업무)절차로서, 동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절차와는 구분됨
  - 심사·감리업무의 수행은 조사업무절차로서 그 자체로는 감리대상자에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2. 심사 감리집행기관

- ✓ 상장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나머지 심사·감리대상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심사·감리업무를담당한다.
- ❖ 외부감사법상 감리업무의 주체는 증권선물위원회이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의 대상을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나누어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에위탁중있음)
  - 외감규정상 심사업무의 주체는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폭공인회계사회)임

< 재무제표 심사 감리 및 조치업무의 주체 >

업 무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업보고서 비제출대상
심사·감리실시		금융감독원장		한공회
제재 조치	심사결과 경고·주의	금융감독원장		한공회 또는 증선위 <sup>주2</sup>
	그 밖의 조치	증선위 또는 금융위 <sup>주1</sup>		

주1) 감사인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직무정지, 과징금(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중 5억원 초과 과징금, 외감법상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조치권자임

주2) 감사인·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치), 회사(증권선물위원회 조치)

## 가. 금융감독원장의 심사·감리업무

### 1) 재무제표 심사·감리및내부회계관리제도감리

- ❖ 금융감독원장은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②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는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③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



원장의 심사·감리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감리 업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업무를 수행함(법 제38조 제1항, 영 제44조 제2항 제16호)

## 2)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기준 감리

- ❖ 금융감독원장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통지한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기준 감리업무(품질관리수준 평가업무 포함)를 수행함(법 제38조 제1항, 영 제44조 제2항 제15호)

### 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사·감리업무

-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심사·감리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에 대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의 심사·감리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는 제외)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업무와,
  - 금융감독원의 감리대상 감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기준 감리업무(품질관리수준 평가업무 포함)를 수행함(법 제38조 제2항, 영 제44조 제4항 제1호)

## 3. 심사 감리의 대상

- ✓ 감리의 대상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품질 관리기준이고, 심사의 대상은 회사의 재무제표이다.

### 가. 재무제표

-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법 제5조 제3항),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감리의 대상이 됨
  - 다만 여기서의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의미하므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감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감사법상의 재무제표란 결산 재무제표를 의미하므로 분·반기재무제표는 외부감사법상의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아니함
    - 그러나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위반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조사절차의 대상이 되므로 감리실무상 분반기 재무제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필요시 자본시장법상의 조사절차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법상의 감리절차와 병행 실시하여 조치하고 있음

## 나. 감사보고서

-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법 제16조 제1항),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감리의 대상이 됨
  - 다만 감사보고서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경우(임의감사) 해당 감사보고서는 감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 ❖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법 제17조 제1항),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는 감리의 대상이 되며,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도 실시될 수 있음

##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 ❖ 개정 전 구 외부감사법에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운영, 감사인의 부실검토에 대해 감리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음
- ❖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를 감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영 제29조)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사대상이 되므로,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도 회계감사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감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8조 제6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영 제9조 제8항)

# II. 심사·감리의 집행

## 1. 심사·감리의 착수

### 가. 재무제표 심사의 착수사유

- ❖ 감리집행기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① 표본추출

- ❖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

단되는 경우,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임(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 이러한 표본 추출 대상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리 실시 이전에 먼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상장에정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시~를 받고 있는 회사는 표본추출 대상에서 제외 됨

## ② 재무제표 자진수정

- ❖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수정하고 수정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임(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 이러한 재무제표 자진수정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리 실시 이전에 먼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③ 혐의 입수

-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금융회사 검사 등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수행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임(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3항)
  - 위와 같은 사유는 감리 착수사유에도 해당하며, 감리집행기관은 시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감리 실시 이전에 먼저 재무제표 심사를 거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재무제표 감리의 착수사유 및 미실시사유

### 1) 재무제표 감리의 착수사유

- ❖ 감리집행기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법 제26조 제 1 항 제2호)를 실시할 수 있음

#### ① 재무제표 심사결과에 따른 감리의 착수사유

-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실시사유가 됨(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감리실시 사유가 되는 위법사항 등

- ①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심사 착수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 ③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수정공시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결과 위 감리 착수사유에 해당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외감규정 제23조 제5항)

## ② 감리 등 업무결과 위법사항 발견

- ❖ 감리집행기관이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4호)

## ③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대상 회사 통지

-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 1 항 제5호)

## ④ 회사의 감리신청

- ❖ 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면제 받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감리집행기관)에 감리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3항 제2호, 영 제15조 제5항)
  - 이에 따라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한 경우 감리 실시 사유가 됨(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 6호)

## ⑤ 혐의 입수

-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금융회사 검사 등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수행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8호>
  - 위와 같은 사유는 재무제표 심사 착수사유에도 해당하며, 감리집행기관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감리 실시 이전에 먼저 재무제표 심사를 거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23조 제3항)

## 2) 재무제표 감리의 미실시사유

- ❖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감리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① 수사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 ❖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1호. 다만 수사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됨)
  -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외부의 영향력 없이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임

② 강제조사가 필요한 경우

- ❖ 감리절차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조사이므로, 조사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해당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조사에 의할 수 있도록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2호)

③ 사안이 경미한 경우

- ❖ 해당 혐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3호)
  - 사안이 경미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의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IV. 2.)에 미달하여 조치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

④ 감사조서 보존기간 경과

- ❖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법 제19조 제2항), 이에 따른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4호)
  - ※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 포함)를 작성하여야 함(법 제 19조 제 1 항)

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적절한 경우

- ❖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쟁점 관련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규정 제23조 제4항)
  - 이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회사의 해석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4항 제2호)

## 다. 감사보고서품질관리기준 감리의 착수사유

- ❖ 감리집행기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감리(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품질관리기준 감리 또는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실시할 수 있음

#### 감사인 감리착수사유(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 ① 표본 추출 등(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제1호)
  - ㉠ 회계감사 대상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 감리집행기관의 품질관리 감리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 ㉡ 사업보고서 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제출하는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② 외국 회계감독기관과의 공동 감리(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제2호)
  -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혐의 입쉬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제3호)
  - 상장법인 등록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 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감리 등 업무결과 위법사항 발견(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제4호)
  - 감리집행기관이 감리 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대상 감사인 통지(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제5호)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
- ⑥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제6호)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

####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의 착수사유

- ❖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회사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할 수 있음(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영 제29조, 외감규정 제23조 제13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실시사유

- 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 2. 심사 감리의 절차 및 방법

### 가. 심사의 절차 및 방법

## 1) 심사대상 선정 및 착수

- ❖ 표본 추출, 재무제표 자진수정, 혐의 입수를 사유로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심사 착수시 심사 대상 회사에 심사 착수사실 및 심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을 통보함

## 2) 재무제표 점검

- ❖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심사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을 받아 검토함

## 3) 무혐의 종결

- ❖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로 절차를 종결하고, 심사대상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함(외감규정 제28조 제1항)

## 4) 수정공시권고 후 경조치 종결

- ❖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발견시 회사에 동 위반사항의 수정공시를 권고하고, 과실(중과실 제외)로 인한 비반복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공시권고 이행시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경고·주의)로 심사종결함

## 5) 감리 실시

- ❖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착수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된 경우,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수정공시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리에 착수할 수 있음

## 나. 감리의 절차 및 방법

## 1) 감리대상 선정 및 착수

- ❖ 재무제표 심사결과 고의·중과실 등, 감리 등 업무결과 위반사항 발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대상 회사 통지 등 감리 착수사유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감리 착수시 감리대상 회사에 감리 착수사실 및 감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을 통보함

## 2) 감리의 실시(방법)

-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고,
  -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및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업무·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법 제27조 제1항)

❖ 위와 같은 감리를 위한 조사업무는 감리 등 업무와 함께 감리집행기관에게 위탁되어 있어(법 제38조 제1항, 영 제44조 제2항 제17호, 제4항 제2호) 감리집행기관은 감리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감리 등 대상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규정 제24조 제2항)

- ①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 ② 회사 및 관계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회계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업무·재산상태의 조사

❖ 감리집행 기관은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피조사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목적, 구체적인 요구내용,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위를 피조사자에 문서로 알려야 함 다만, 요구사항을 미리 문서로 알리면 감리등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음(규정 제24조 제3항)

- 다만, 감리집행기관은 요구사항을 피조사자에게 구두(口頭)로 알린 경우 알린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보완하여 통지하여야 함(규정 제24조 제4항)

❖ 피조사자가 변호사를 감리조사과정에 참여시켜줄 것을 감리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켜야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감리지장초래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과정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24조 제5항)

#### 조사과정 참여거부 사유

- ① 증거의 인멸 은닉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 ② 공범의 도주 등 감리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③ 피해자, 해당 사건에 대한 감리 등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 ④ 피조사자가 진술 등 조사과정에 협조함으로써 인해 소속 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 감리집행기관은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후 위 감리지장초래사유 또는 다음과 같은 감리방해사유의 발생·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24조 제6항)



**대리인 퇴거 요구 사유**

- ① 피조사자의 대리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 감리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심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 ③ 피조사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 ④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cm, 피조사자에 대한 조언을 위해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는 제외)
- ⑤ 그 밖에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 감리집행기관은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피조사자의 문답서,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안전에 각각 기재하여야 함(외감규정 제24조 제 7항)
- ❖ 감리집행기관은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대상 회사, 감사인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
  - 다만, 감리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질문서 발부를 생략 가능함
- ❖ 피조사자는 문답서, 확인서(감리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문서) 및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25조 제1항)
  - 다만 감리집행 기관은 규정 제24조 제5항의 조사과정 참여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검찰 고발, 통보 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에 관하여 문답서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외감규정 제25조 제2항)
    - ※ 감리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질문서를 받은 날(질문서가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복사신청을할수있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음

**3) 감리기간**

- ❖ 외부감사법·시행령상 감리·조사기간을 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감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도록 감독원장 시행세칙으로 규정하였음(2022.5.31. 이후 감리에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감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추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였음

- ❖ 한편, 위반혐의와 관련한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관계법규·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질의회신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감리가 중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중단된 기간은 심사·감리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4) 무혐의 종결

- ❖ 감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로 감리를 종결함

#### 5) 조치안 작성

- ❖ 금융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 시정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함(시행세칙 제38조 제1항)

### 3. 심사 감리결과와 처리

#### 가. 심사결과 처리절차

##### 1) 회계심사협의회의 심의

- ❖ 수정공시권고, 금융감독원장의 조치 등 심사결과와 처리에 있어 절차의 투명성 및 조치의 일관성 등 제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심사협의회 설치·운영
  - 금융감독원의 전문심의위원(의장), 회계학교수, 회계심사·감리부서장 등으로 구성
  -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용·동기, 수정공시권고 여부, 회계처리기준 관련 쟁점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보고 여부 등 심의

##### 2) 위반사항 수정공시권고

- ❖ 금융감독원장은 심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심사대상 회사에게 위반의 내용 및 판단근거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자체 검토 및 감사인 협의 후 동 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며,
  - 권고내용에 대한 자체 검토 및 감사인과의 협의결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권고사항의 이행결과 또는 미이행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사대상 회사가 수정공시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또는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 이행계획기간 이내에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이유없는 수정공시권고 미이행'으로 보아 감리착수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 착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① 심사대상 회사가 수정공시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한 경우
- ② 심사대상 회사가 수정공시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정공시권고에 대한 이행의  
사 및 이행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 금융감독원장은 수정공시권고의 대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미 충실하게 수정공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정공시권고를 생략할 수 있음(시행세칙 제37조의2)

### 3)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 종결

- ❖ 과실(중과실 제외)로 인한 비반복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공시권고 이행시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경고·주의)로 심사 종결
  - 금융감독원장은 심사결과 경조치(경고·주의)를 하는 경우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시행세칙 제40조 제1항)
  -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음(시행세칙 제40조 제2항)
  - 조치 내용·이유, 불복절차 등을 피조치자에게 통지하여 조치 시행

### 나. 감리결과 처리절차

- ❖ 금융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여부를 결정함
  - 금융위원회의 조치(감사인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직무정지)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금융위원회는 동 건의를 참고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함
  - 금융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의 상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시행세칙 제40조 제1항)
  -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음(시행세칙 제40조 제2항)

### 1) 감리위원회의 심의

- ❖ 감리위원회는 감리결과조치·이의신청·직권재심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 소속 기관임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 가능
- 감리결과조치 등의 안전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임
    -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 가능
-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치안전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감리결과 조치여부 및 종류·양정을 결정함
  - 감리결과조치의 처분권자는 일반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이나 조치 중 감사인의 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직무정지의 처분권자는 금융위원회이며(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48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업무(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의 건의를 할 수 있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중 5억원 이하 과징금의 부과권자임(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 3) 금융위원회의 의결

-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금융감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기관임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기획재정부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임명직 위원(금융전문가 2명, 경제계대표 1명)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 가능
- ❖ 금융위원회는 감리결과조치 중 감사인의 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직무정지의 처분권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를 참고하여 동 조치 여부를 결정
  - 또한 금융위원회는 법에 새롭게 도입된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

금,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중 5억원 초과 과징금의 부과권자임(법 제35조, 자본시장법 제429조)

### Ⅲ. 심사·감리결과조치

#### 1 행정제재조치

##### 가. 회사에 대한 조치

-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또한 퇴임·퇴직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동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외감규정 제26조 제1항)

##### 회사에 대한 조치

- ①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 ②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 ③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 ④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 ⑤ 경고
- ⑥ 주의
- ⑦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나. 감사인에 대한조치

-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29조 제3항, 외감규정 제26조 제3항)

##### 감사인에 대한 조치

-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등록취소,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음
  - 다만 금융위원회의 감사인 등록취소·업무정지처분은 공인회계사법 제39조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모든 외부감사법령 위반이 감사인 등록취소·업무정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위반사항이 외부감사법상의 조치건의사유 및 공인회계사법상의 감사인 등록취소·업무정지사유가 되는 경우 동 조치의 건의가능
- ②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④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 포함)
- ⑤ 경고
- ⑥ 주의
- ⑦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결과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 또한 개선권고사항 및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음(법 제29조 제5항~제7항)

#### 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29조 제4항, 외감규정 제26조 제4항)
  - 감사담당이사를 주책임자,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를 보조책임자로 하여 조치(외감규정 제26조 제5항)
  -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조치 가능(외감규정 제26조 제6항)
    - ① 주책임자에 등록취소건의,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건의를 하는 경우 :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감사인의 대표이사
    - ② 주책임자에 등록취소건의,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 주식회사·법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을 하는 경우 :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중간감독자)

####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음
- 다만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 등록취소·직무정지처분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모든 외부감사법령 위반이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직무정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위반사항이 외부감사법상의 조치건의사유 및 공인회계사법상의 공인회계사 등록취소·직무정지사유가 되는 경우 동 조치의 건의 가능

##### ②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④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연간 20시간 이내)

##### ⑤ 경고

##### ⑥ 주의

##### ⑦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2. 검찰에 대한 고발 등

- ❖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외부감사법상 형벌규정(법 제 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벌칙부와 대상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고발하지 않고 검찰총장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음
  - 고발은 범죄피해자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로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이나
    - 이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와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26조 제8항)

## Ⅳ.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 ✓ 심사·감리결과 조치에 대한 주요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행정절차법 제26조)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피 조치자에게 조치 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 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함
  - 다만 검찰에 고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33조 제1항)
- ❖ 처분에 해당하는 심사·감리결과 조치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불복 절차의 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발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함
- ❖ 피조치자에게 인정되는 주요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임

### 1. 이의신청

#### 가. 개요

-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등을 수행한 결과 법 제 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 등(조치 등)을 하는 경우,
  - 피조치자는 조치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33조 제2항)
  - 외부감사법상 이의신청제도는 피조치자가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의 당부에 대하여 행정청 내부에서 직권으로 재검토받을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행정심판 제도와 취지가 유사하나 행정심판에는 해당하지 않음

#### 나. 이의신청 절차

- ❖ 피조치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



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도래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 포함)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린 이후에 피조치자는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2. 행정심판

### 가. 개요

- ❖ 심사·감리결과조치가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행정청(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감리업무의 수행기관이고 감리결과조치를 처분한 기관은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장은 감리결과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 심사결과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 나. 이의신청제도와와의 관계

- ❖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진행을 중단 연기시키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의신청 절차 진행 중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 3. 행정소송

### 가. 개요

- ❖ 심사·감리결과조치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행정청(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이 감리결과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점은 행정심판에서 본 바와 같음

## 나. 이의신청과의 관계

- ❖ 취소소송(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이의신청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제소기간은 심사·감리결과조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심사·감리결과 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인용되어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쟁송취소) 당해 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됨
  - 다만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과는 당사자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사·동일한쟁점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조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V.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한 직권재심

-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직권취소)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다시 심의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135조)

### 직권재심 사유

- ①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증거문서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 -

-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세기본법

- ❶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낮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 ❷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 국세징수법

- ❶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 소득세법

- ❶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①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 \* (현행) 10/20/22/25% → (정부안) 10(중소·중견기업)/20/22% → (수정) 9/19/21/24%

②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 \* (정부안)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30%~50%> 80% <30%미만> 30%
- (수 정)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20%~50%> 80% <20%미만> 30%

③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개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②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③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

- \* (현행) 중소기업 → (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종합부동산세법

①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②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

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 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 \* (현행) 5년 → (정부안) 적용기간 폐지 → (수정) 20년
- ②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 신설
  - \* '23.1.1.~12.31.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
- ③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 (현행) 연 150만원 → (개정) 연 200만원
- ④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 \* (정부안) 50% 이하 → (수정)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 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 \* 적용대상 중견기업 :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 \* 수익사업소득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
- ⑦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 ⑧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현행) 10% → (정부안) 12% → (수정) 15%
  -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현행) 12% → (정부안) 15% → (수정) 17%
- ⑨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⑪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⑫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 \* (정부안) '23.4.1. 이후 적용 → (수정) '23.1.1. 이후 적용
- 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 ⑭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 참 고

##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 국세기본법

①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 경·공매시 국세와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우선순위</p> <p>○ (원칙)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p> <p>○ (당해세 우선)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증세 및 종부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p> <p>○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순위)</p> <p>-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p> <p>* 제3자에 해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채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좌 등)</p> <p>○ 판례의 취지를 법에 반영</p> <p>i) (원칙) 국세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미적용</p> <p>ii) (예외)</p> <p>■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채납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 한도 내</p> <p>■ 소유자 변경 이후 발생한 종부세</p> <p>□ 당해세 적용 예외</p> <p>○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p> <p>* 우선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세금채납액 소멸은 아님</p>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국기법 §88)

정 부 안	수 정 안
<p>□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p> <p>○ (대상)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기피</p> <p>*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 근거</p> <p>○ (과태료 상한)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p>	<p>□ 과태료 상한 인상 금액 변경</p> <p>○ (좌 등)</p> <p>○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p>

< 수정이유 > 점진적 인상 추진

< 시행시기 > '23.1.1.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

#### 국세징수법

### ①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b>①</b>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회망자 <b>②</b>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b>③</b> (열람절차) i) 임대차계약전에 ii)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iii)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 (좌 등) <b>④</b>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 i)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 임대차개시일까지 ii) 예외신설 ■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 (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iii)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iv) 통지의무 신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②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국징법 §11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채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추 가>	<input type="checkbox"/> 활용대상 금융 정보에 금융투자소득 정보 추가 ○ (좌 등)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 수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 시행시기 > '25.1.1. 이후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이상 등) 현행 유지 (소득법 §94 · 104 · 115 · 118의9, 소득령 §157 · 167의8 · 168 · 169 · 178의8 · 225의2 등)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 대주주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 대주주 명칭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완화(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4.1.1.~'24.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좌 동) ○ '24.1.1.~'24.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법인세법

## ①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li> <li>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5억원 이하</td><td>10% (중소·중견기업) 20%</td></tr> <tr> <td>5~200억원</td><td></td></tr> <tr> <td>200억원 초과</td><td>22%</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li> <li>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li> </ul> </li> </ul>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기업) 20%	5~200억원		200억원 초과	22%	<input type="checkbox"/> 법인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9%</td></tr> <tr> <td>2~200억원</td><td>19%</td></tr> <tr> <td>200~3,000억원</td><td>21%</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기업) 20%																		
5~200억원																			
200억원 초과	22%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lt; 수정이유 &gt; 국회 심의결과 반영

## ②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head> <tbody> <tr> <td>50%이상</td><td>100%</td></tr> <tr> <td>30%이상 50%미만</td><td>80%</td></tr> <tr> <td>30%미만</td><td>3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li> </ul>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30%이상 50%미만	80%	30%미만	30%	<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률 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head> <tbody> <tr> <td>50%이상</td><td>100%</td></tr> <tr> <td>20%이상 50%미만</td><td>80%</td></tr> <tr> <td>20%미만</td><td>3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li> </ul>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20%이상 50%미만	80%	20%미만	3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30%이상 50%미만	80%																
30%미만	3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20%이상 50%미만	80%																
20%미만	30%																

&lt; 수정이유 &gt; 국회 심의결과 반영

### ③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④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적용시기 특례(법인법 §30·§31의2·§42의3 부칙)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제외 ○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 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div>	<input type="checkbox"/>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설정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 10px 0;"></div> ○ (좌 동) ○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2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 지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상증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상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200억원 → 400억원</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300억원 → 600억원</td></tr> <tr> <td>30년 이상</td><td>500억원 → 1,000억원</td></tr> </tbody> </table>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1,000억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조정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00억원</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00억원</td></tr> <tr> <td>30년 이상</td><td>600억원</td></tr> </tbody> </table>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1,000억원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 → 5년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 40% 이상 처분 제한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②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12·74·75·78)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전 환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과세방식) 비과세 → 징수유예* *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 ○ (납세담보) 징수유예 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의무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담보 면제 규 정 등 신설 ○ (좌 동) ○ (좌 동)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허용 - 다만, 사전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 고, 위반 시 가산세 부과 <b>①</b> (사전 신고) 상속인은 문화재 양도 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 * 위반시 상속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b>②</b> (자료 제출) 매년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 현황을 제출 * 위반시 상속세액의 1% 가산세 부과

< 수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input type="checkbox"/> 제외 대상 축소 ○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종합부동산세법

## ①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중부세법 §9)

정 부 안		수 정 안		
□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과 세 표 준	세 율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2.7%	5.0%
법 인	2.7%	법 인	2.7%	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주세법

## ①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정 부 안	수 정 안
□ 주세율의 물가 연동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li> <li>○ (조정주기) 매년 조정</li> <li>○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math display="block">\text{세율} = \text{직전연도 말 세율} \times (1 + \text{가격변동지수})</math> </div>	□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3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ul>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교육세법

## 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의 시행시기 보완(교육세법 §5③·7)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한 보험료 공제금액 (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등)</li> <li>○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규정 외 「법인세법」 § 40, § 43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및 약관대출이자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 ㉠, ㉡ 제외</li> <li>㉠ 보험기간 미경과분 → 기간 경과한 과세기간</li> <li>㉡ 중도해약분 → 중도해약한 과세기간</li> </ul> </li> </ul> </li> <li>○ (시행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li> </ul>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보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부터 IFRS17 적용기업은 '23년 신고분부터 적용</li> </ul> </li> </ul>

< 수정이유 > IFRS17 조기 적용기업 지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국외투자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국조법 § 34의2)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외투자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투자단체) ❶+❷의 요건 충족하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li> <li>❷ 설립지국 세법상 ❶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li> </ul> </li> <li>○ (적용절차) 국외투자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이후 국외투자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포기 불가</li> </ul> </li> <li>○ (적용효과) 국외투자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소득세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소득구분 일치)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자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름</li> <li>❷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자단체에 소득 귀속시 그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li> </ul> </li> </ul>

< 수정이유 > 해외 투자시 해외에서의 과세상 불이익 방지

< 시행시기 > '23.1.1. 이후 적용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 적용기간 없음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확대 ○ (좌 동)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②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4)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 수정이유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③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확대 ○ (좌 동)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④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조특법 §30의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 제외 대상 <input type="checkbox"/> 중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input type="checkbox"/> 50% 초과 → 50% 미만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lt; 수정이유 &gt; 국회 심의결과 반영

## 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조특법 §30의6)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input type="checkbox"/> 적용한도 등 확대 <input type="checkbox"/> (적용한도) 100억원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table border="1" data-bbox="219 1036 716 1165">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적용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400억원</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600억원</td></tr> <tr> <td>30년 이상</td><td>1,000억원</td></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세율)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 20% → 60억원 이하 : 10% 60억원 초과 : 20%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기간 단축 <input type="checkbox"/> 7년 → 5년	가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조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적용한도 조정 <table border="1" data-bbox="777 1036 1274 1165">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적용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00억원</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00억원</td></tr> <tr> <td>30년 이상</td><td>600억원</td></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가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가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lt; 수정이유 &gt; 국회 심의결과 반영

##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조특법 §74)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input type="checkbox"/>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 사업소득금액의 100% ○ (적용기한) '25.1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추가*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  ○ (좌 동)
--	---

< 수정이유 > 체육단체 활동 지원

<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⑦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 (납입한도) 연 840만원 ○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 ⑧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12%* →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상향 폭 확대 ○ (좌 동) ○ 12%·15%* → 15%·17%*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⑨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조특법 §99의4)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 건) ①·②·③ 모두 충족 ① (보유기간) 3년 이상 ② (소재지)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③ (가 액) 기준시가 3억원 (한옥 4억원) 이하 ○ (지원내용)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 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적용기한) '25.12.31.까지 취득분	<input type="checkbox"/> 소재지 요건 완화 ○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① (좌 동) ②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③ (좌 동)  ]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조특법 §100조의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 (일반 동업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 득금액을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 ○ (수동적 동업자)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 득으로 과세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우 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 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input type="checkbox"/>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되는 수동적 동업자 범위 확대 ○ (좌 동)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비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는 일 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수정이유 >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일몰연장(조특법 §100조의3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종료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적용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25.12.31.

< 수정이유 > 중견기업 등을 제외하여 세부담 완화

1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5)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4.1.1. ~ '25.12.31.

< 수정이유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

13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1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 (기본 면세한도) \$800 이하 ○ (별도 면세한도) 술·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2병(2ℓ · \$400이하) - (담배) 200개비 ○ (적용시기) '23.4.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적용시기 조정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20px;">             ○ (좌 동)           </div> ○ '23.1.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국회심의 결과 반영

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121의1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 (적용기한) '23.12.31. <추 가>	<input type="checkbox"/>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좌 동) ] ○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좌 동) ○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5.12.31.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지역 투자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㉕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 (공제율) 10% ○ (공제한도)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10% → 20% ○ (좌 동)

<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관세법

㉑ 당사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가능 사유 확대 등(관세법 §116)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 제공 ○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음 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b>①</b>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b>②</b>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b>③</b>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공가능 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p>④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p> <p>⑤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 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⑤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민간은행 등이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과세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p> <p>⑥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 누설 또는 목적외 사용 시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p>
---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3.4.1. 시행

②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 신설(관세법 § 233의2)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가능</p>	<p><input type="checkbox"/>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목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li> <li>○ (출연·보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 가능</li> <li>○ (수행사업) 원산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원산지 검증 및 전문인력양성 등*</li> </ul> <p>* ①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정책·활용 관련 정보 수집·분석·제공</p> <p>② 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p> <p>③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 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④ FTA 및 원산지 관련 교육,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p> <p>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위탁한 사업 등</p> <p>○ (지도·감독)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p>

< 수정이유 > 원산지 관련 업무의 안정적 수행

< 시행시기 > '23.7.1. 시행

③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 신설(관세법 § 322<sup>⑩</sup>~<sup>⑫</sup>)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허용 *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 ○ (제공목적)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 ○ (제공대상) - 국회의원 -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제공장소) 관세청 내 설치된 특정구역(분석센터) ○ (목적외 사용금지) 관세무역 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목적 외 사용금지

< 수정이유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관세정책 평가·연구 지원

< 시행시기 > '23.4.1. 시행



#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1일(목)	12월 2일(금)	12월 5일(월)	12월 6일(화)	12월 7일(수)
미 달 러 (USD)	1320.10	1300.80	1300.40	1293.20	1309.00
위 안 화 (CNH)	184.62	184.52	184.30	185.82	187.81
일 본 엔 (JPY)	957.74	961.74	966.59	945.63	955.93
유 로 화 (EUR)	1375.02	1368.90	1369.71	1357.08	1370.20
영 국 파 운 드 (GBP)	1593.76	1594.26	1596.89	1576.93	1588.14
캐 나 다 달 러 (CAD)	984.16	968.29	965.19	951.48	958.90
홍 콩 달 러 (HKD)	169.10	167.22	166.96	166.50	168.38

통 화 명	12월 8일(목)	12월 9일(금)	12월 12일(월)	12월 13일(화)	12월 14일(수)
미 달 러 (USD)	1319.50	1320.40	1306.60	1310.00	1304.40
위 안 화 (CNH)	189.02	189.55	188.07	187.67	187.12
일 본 엔 (JPY)	967.13	966.30	955.75	952.35	963.05
유 로 화 (EUR)	1386.79	1394.28	1375.59	1380.48	1387.36
영 국 파 운 드 (GBP)	1610.98	1615.05	1600.45	1607.24	1614.00
캐 나 다 달 러 (CAD)	966.45	971.60	957.39	960.90	963.05
홍 콩 달 러 (HKD)	169.35	169.58	167.85	168.52	167.77

통 화 명	12월 15일(목)	12월 16일(금)	12월 19일(월)	12월 20(화)	12월 21일(수)
미 달 러 (USD)	1296.00	1301.00	1310.10	1302.00	1298.00
위 안 화 (CNH)	186.12	186.99	187.57	186.40	186.32
일 본 엔 (JPY)	956.74	944.43	961.58	950.89	983.74
유 로 화 (EUR)	1383.61	1382.96	1387.92	1381.29	1379.32
영 국 파 운 드 (GBP)	1609.37	1584.62	1594.00	1581.80	1581.68
캐 나 다 달 러 (CAD)	956.46	952.35	957.54	953.99	953.85
홍 콩 달 러 (HKD)	166.74	167.31	168.31	167.31	166.67

통 화 명	12월 22일(목)	12월 23일(금)	12월 26일(월)	12월 27일(화)	12월 28일(수)
미 달 러 (USD)	1286.60	1276.10	1282.20	1276.40	1268.30
위 안 화 (CNH)	184.60	182.86	183.22	182.61	181.75
일 본 엔 (JPY)	972.45	963.68	965.40	961.04	950.18
유 로 화 (EUR)	1364.83	1352.67	1361.82	1357.71	1348.96
영 국 파 운 드 (GBP)	1554.15	1536.17	1546.46	1540.74	1525.45
캐 나 다 달 러 (CAD)	945.23	935.01	942.31	940.05	937.88
홍 콩 달 러 (HKD)	165.01	163.70	164.29	163.50	162.58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 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